

ISSN 1226-637X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4

통권 46 호 2009

권두언 / 기업의 희망과 비전, 충남이 선도해야

특집 / 충남의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

충남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금강 살리기와 지역연계발전 전략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충남의 전략

충남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열린충남은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지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연구 수행으로
충남의 미래를 여는 일류 Think Tank로 발돋움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합니다.

2009년 4월 1일 (통권46호)

발행인 김용웅

편집위원장 이인배

편집위원 · 원내: 강영주, 권영현, 고승희, 오용준, 신동호, 유학렬, 이인희, 오혜정
· 원외: 황창연(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오석민(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 및 편집간사 정봉희

발행처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연락처 041-840-1123 팩스 042-840-1129

홈페이지 <http://www.cdi.re.kr>

디자인·인쇄 중부인쇄기획(042-253-7537)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46호 2009. 4

Contents



권두언

- 006 기업의 희망과 비전, 충남이 선도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근국

특집 / 충남의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

- 008 충남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박종찬
014 금강 살리기와 지역 연계 발전 전략 한상욱
022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충남의 전략 김봉한
029 충남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한무호

충남논단

- 040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전병관
057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의 시사점 양도식·조봉운
078 [연재 1] 활기찬 중심시가지 창조를 위하여 박철희

해외탐방

- 088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충훈

충남의 도시

- 112 국방문화와 병영체험의 중심거점 연무소도읍 윤정미



충남축제탐방

- 120 서산 해미읍성축제 & 아우내 봉화축제 이용원

오피니언

- 126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영완
129 공주 · 부여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서만철

충남소식

- 133 도정소식
143 연구원소식
151 RHRD소식
153 RIS소식
154 수질관리센터
155 도시재생센터

문화유산

- 161 직산현 관아



기업의 희망과 비전, 충남이 선도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근국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기업은 주문이 줄어든 상태에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원의 감원을 꺼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 추세다. 영세자영업자는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불확실한 여건 하에서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서도 연일 중소기업지원대책, 실업대책, 그리고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의 추가적인 금융부실 등 불확실한 변수와 국내외의 소비위축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돈을 풀고 이자율도 추가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려 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기 몸 챙기기를 위해 일부 우량기업에만 돈을 제한적으로 풀고, MMF등에 시중자금이 고여 있어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2008년 4/4분기 이후 실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침체가 우리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 감소, 내수 침체로 인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하락하였다. 내수용 출하증가율 또한 전년 동기대비 12.1% 감소하였고, 수출용 출하증가율도 8.9%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4/4분기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를 기록하였다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한 2009년의 세계경제전망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고, 신흥개도국의 경기도 급속한 하강이 전망되어 0.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전망은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경제도 많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다행히 경제반등을 주도할 반도체, LCD를 비롯한 자동차, 석유화학을 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 지자체장의 경제마인드와 강력한 리더십, 그

리고 충청인 특유의 끈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충남은 지난 2년 동안 외자유치 연속 1위, 1,900여개의 기업유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달성기 어려운 전국 수출의 1/10 점유와 GRDP 성장률 6% 등 활기찬 성장을 이뤄왔다.

이제 우리 지역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도래할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을 품어 안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에 공급할 인적자원의 개발과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인력유입 인프라 구축,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기업투자에 따른 애로 해소,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만한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제도 마련 등이다.

우리 지역 기업도 소비자에게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 ONLY ONE 기술보유를 위한 노력,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을 탈피한 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좀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과 지역민에 대한 우선적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다. 오히려 당시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많은 학습과 교훈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합리적 경영과 경쟁력 증대를 통해 나름대로 자생력을 높이기도 하였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이에 따른 자금압박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조업시간 단축, 종이 한 장도 아끼려는 구두쇠 경영, 그리고 거래처 유지와 새로운 수요처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경제단체, 그리고 지원기관은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발굴, 그리고 지원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업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나무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잎을 내려놓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며 새로운 봄을 준비한다. 더 풍성한 잎을 만들고 탐스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 어려움은 계절의 변화처럼 머지않아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움이 도래할 것이다. 그 새로움이 '희망'과 '비전'이란 이름의 미래라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

충남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박종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이번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역사의 반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에서 자유시장경제는 가격기능(Price Mechanism)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s)"에 의해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개입보다는 시장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이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해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은 1929년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 수요 창출이 공황을 탈출하게 할 수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Sir, John Maynard Keynes)의 등장을 맞게 된다. 케인즈의 등장 이래 케인즈주의(The Keynesians)는 경제를 통치하는 대세가 되었고,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을 보완해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발전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함께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 아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불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의 세세한 개입을 통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시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 경제학적으로는 신고전파(The New Classical) - 가 등장하여 1980년 이후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경제를 통치하는 근간이 되었다. 1988년 구소련의 붕괴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우월성을 확신하면서 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한 무조건적 신앙심을 갖게 되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은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발전의 속도를 더해왔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는 방종을 허락하게 되어 금융시장에서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이기심은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그 거품이 터지게 되면서 실물경제의 위기로까지 전파되는 과정에 이른 것이다.

이제 역사는 다시금 시계바퀴를 돌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한 개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옹호하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달러 본위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더욱 강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변방이라는 점과 금융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부문에서 미국시장과 중국시장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실물경제의 위기에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상태가 기본이 충실하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고 건실한 지 아닌 지는 위기가 와서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금번 위기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마지막 관문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시험 속에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LCD, 전자, 자동차, 제철 및 석유화학산업 등의 주요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한국 산업구조의 축소판이면서 동시에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충남경제가 있다. 따라서 충남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세계 및 한국의 경제위기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충남 경제의 현황과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방법을 모색해본다.

경제위기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는 향후 1~2년간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하반기, 특히 미국의 투자회사 Lehman Brothers가 파산한 9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는 이미 큰 충격을 받고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들의 성장세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OECD 등 글로벌 연구기관이 내놓는 2009년 세계경제 전망치도 갈수록 하향조정 되고 있

다. 지난해 10월 3.0%로 기대되었던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1월에는 2.2%(IMF), 12월에는 0.9%(World Bank)로 낮아졌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내놓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일 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국유화 논란은 금융위기의 끝이 어딜까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에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전망치는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규모 공적개입, 금리인하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사상초유의 정책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한 케인즈주의적 해결책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국과 동유럽 금융회사들의 문제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 국내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세계경제의 견실한 회복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이 이번 위기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지나친 낙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금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문제여서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 지각판이 요동을 치고 있어 각국이 서로 자기 살기에 바쁜 형편이라 남을 돌 볼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 경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책임을 진 미국조차 자기 살기에 급급한 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올바른 정책으로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지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인지 가름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2009년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의 위축은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실질 GDP가 전년동기 대비 3.4%, 전기대비로는 5.6%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연간 성장률은 2.5%

에 그쳤다. 2008년 12월 발표된 '산업활동동향'은 경제지표들의 감소 속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1월중 생산, 투자 등은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소비지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은 더 심각하다. 2008년 9월까지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이 11월과 12월에는 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급기야는 2009년 1월에는 세계적 경기침체와에 따른 각국의 수요 감소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사정 또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경제상황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09년 성장률 전망이 1%대 혹은 그 이하까지 내려왔다. 일부 외국계 전망기관들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불안, 가계소득 악화, 신용경색 등으로 소비, 투자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출마저 선진국 및 개도국의 동반침체 전망에 따라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안정대책 및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해보지만 L자형 국면에 그칠 전망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경제 예측 전망들이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경제가 7~8%대의 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성장의 감소는 선진국경제 위축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경제의 2008년 성장률이 9%에 그치면서 그 동안의 두 자릿수 성장세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경제의 둔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급격히 감소할 경우,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충남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주요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 온 충남경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대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사는 대전·충남지역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세계경제 동반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소비는 가계소득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

주택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감퇴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 반도체, 화학제품 등 주력업종을 비롯한 대다수 업종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활동도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LCD를 비롯한 대다수 업종의 부진으로 감소로 반전(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8. 3·4분기 10.8%, 4·4분기 -7.1%) 되었다. 충남지역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감퇴 등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반도체, LCD,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의 부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충남 주요 수출기업의 중국 및 미국 시장의존도가 크게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출은 미국 및 중국의 경기하강이 진정될 때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충남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위기타개 경제정책은 단기와 중장기 정책으로 구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최우선과제로 경기하강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는 취약계층의 사회 복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등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의 기본적 생활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생활 및 업무 기반이 붕괴되어 버리면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과감하게 큰 폭으로 집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는 중장기적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충남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켜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러한 위치가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위기 속에서도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는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으로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일자리의 질도 낮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녹색성장 산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취약한 중앙정부 정책의 취약점을 뛰어 넘어 5년 10년 후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중점을 지속적으로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갖게 된다.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간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금번 위기에서 보듯이 지나친 수출 의존도로 인해 역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 변수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래 충남의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 그 중 부품소재 부문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자생력이 있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마침 엔고로 인해서 일본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큰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기업과 국가 탄생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충청남도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더욱 더 확고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배진한, "대전 충남지역의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2. 백운성, "충남경제의 특성분석", 충남발전연구원, 2008.
3. 산업연구원,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2004.
4.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2009.02.
5.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2008.02.

금강 살리기와 지역연계발전 전략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금강 살리기의 주요 내용

중앙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홍수 피해의 규모 증가에 따른 사전예방 부족 및 과다 비용지출과 2011년을 기점으로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 아래, 홍수 및 가뭄의 근원적 방지,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극대화, 침체된 실물경기회복이라는 목적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금강 살리기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재해예방 및 수자원 공급능력의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하천제방 단면을 확대하고, 월류에도 안전한 수퍼제방 축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토사 퇴적구간의 하도정비,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를 건설하고 농업용저수지 정비가 이어진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기존의 치수 및 이수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하천공간의 합리적 정비로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친수 및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여 레저시설 등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고, 상습 침수지는 습지 등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수변구역에 생태벨트를 조성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개발로 연계

발전측면에서의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인근 관광거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수변지역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친환경 녹색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 1〉 금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범 위	사업량	사업비(억원)	비 고
치수 및 이수	제방보강	120km	4,124	국토부
	하도정비	4천만㎡	4,878	국토부, 지자체
	농업용저수지	24개소	8,358	농림부
	계		17,360	
친수 및 환경	하천환경정비	201.2km	6,201	국토부, 지자체, 민자
	자전거길	255km	185	국토부
	산책로 등		28	국토부
	계		6,414	
총계		23,774억원(국토 13,089, 농림 8,358, 기타 2,327)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안내책자, 2009

금강 살리기의 주요 쟁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금강 살리기는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선도 사업-계속사업-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단기간의 사업추진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기간내의 사업 완결성을 위하여 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강 살리기의 근본과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자원 확보측면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2006년까지 금강은 다른 강에 비하여 용수부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취지와 부합하는 홍수 및 가뭄에 대응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이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2〉 4대강 유역별 장래 용수부족량 전망

구 분 \ 년 도	2001	2006	2011	2016	2020
한강	△12	△22	△769	△966	△1,191
낙동강	△65	△129	△748	△889	△1,000
금강	+146	+121	△104	△172	△186
영산강	△9	△72	△215	△241	△256
합계	+60	△82	△1,836	△2,268	△2,633

주 : 영산강은 영산강과 섬진강을 합한 수치임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한국수자원공사, 2006

두 번째는 수질확보 측면에서 기존 하수도 및 정수처리시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생활폐수 및 축산농가의 확대, 비료사용 증가 등으로 TN, T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불어서 유해 오염물질 퇴적에 의한 수질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COD는 낙동강 및 금강수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BOD는 영산강 수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강의 경우 금강하굿둑은 높은 BOD, COD수치를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수질악화를 위한 방지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갈수기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자원 추가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수변구역의 환경보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역의 토지이용 적합성 등을 고려한 수변구역의 오염관리 강화 및 식생대 조성 과 하천주변에 녹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를 통한 녹색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표 3〉 4대강 주요 지점별 수질 현황

구 분	주요지점	COD(mg / ℓ)	사업비(억원)	비고
한강	가양	5.2	3.0	
낙동강	구포	6.1	2.6	
금강	공주	6.6	2.6	
	부여	6.6	2.9	
	금강하굿둑	8.8	3.9	
영산·섬진강	광주	5.1	3.7	
	나주	5.6	5.0	
	무안	5.1	1.8	

주 : 금강하굿둑은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 자료임(<http://gg.me.go.kr>)

자료 :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특히, 금강 하굿둑의 경우 1990년에 농지개량조합(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 그 수질이 날로 심각해져 향후 10년 이후에는 지금의 영산강과 같은 수질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지금부터라도 금강 하굿둑에 대한 면밀한 기초자료 조사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에서 금강 살리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내용이 치수 및 이수부문의 제방보강, 하도정비, 농업용저수지 개발과 친수 및 환경부문의 하천환경정비, 자전거길 조성, 산책로 조성인 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은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매우 제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은 사업추진형태에 있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하천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년 5월까지 수립되는 마스터플랜에서는 지자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금강 살리기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존사업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연계 발전 전략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12월에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한 바, 녹색뉴딜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다.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를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강, 넉넉하고 깨끗한 강, 생명이 숨쉬는 강, 문화와 휴식의 강을 조성코자 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의 정책목적과 부합하고 금강 살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첫째 과제가 금강하굿둑이다.

녹색뉴딜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는 하나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겉포장만 바꾼 중복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굿둑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대하다

경제적 가치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하구환경의 가치를 논할 때에, 특히 하구개발과 관련하여 개

발과 보존의 가치비교를 할 때에 개발계획을 전제로 하여 하구의 보존가치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하구의 상대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된 Costanza 외(1997)가 자연과학의 가장 저명한 국제적 학술지인 Nature에 개발과 관련 없이 자연환경의 순수한 가치만을 비교하여 발표한 바 있다<표 4>. 하구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서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염의 공급에 의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강조되는 가치로서 심미적 및 관광적 가치를 들 수 있다. Costanza 외는 여기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하구 대도시의 경우처럼 항구로서의 기능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하구생물에 의한 유전공학적 가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Costanza 외는 이들 자연환경의 가치가 최소가치라고 평가하였으므로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은 제시된 가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Costanza 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중에서 하구환경이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경작지에 비해서는 무려 250배의 가치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표 4>의 자료를 통해 하구환경과 호수환경을 경제성과 희귀성을 간략히 비교해보면 하구의 경제적 가치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연호수의 약 3배에 해당하며, 경작지에 비해서는 약 250배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희귀성에 있어서도 하구는 전지구상에서 랍사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내륙습지나 연안습지의 면적과 비슷한 양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화호, 화옹호, 새만금호의 간척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수를 유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금강을 하나의 문화권을 묶어서 그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공간적인 범역을 일컫는데, 여기서 금강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금강의 역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새로운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인지권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강문화권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공간범역의 설정을 위한 학술 연구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충남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홍보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금강 주변지역간의 집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 형성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는 인문적 측면에 있어서 역사·문화적 기준으로 지역 및 지명의 유사성, 문화적 동질성 및 유사성, 동일 생활·교류인지권으로 고려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으며, 지역개발측면에 있어서는 연계개발의 효율성, 파급효과의 광역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균형발전성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연계개발의 효율성은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자원을 연계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

〈표 4〉 생태계의 가치 최소 추정치

구 분	면적 (10 ⁶ ha)	ha당 연간 총가치(\$)						지구적 총가치 (\$yr ⁻¹ *10 ⁹)
		식 량 생 산	수자원 공 급	폐기물 정 화	영양염 순 환	기 타	계	
○해양	36,302						557	20,949
－ 대양	33,200	15			118	119	252	8,381
－ 해안	3,102	93			3,677	282	4,052	12,568
• 염하구	180	521			21,100	1,211	22,832	4,110
• 해조대	200				19,002	2	19,004	3,801
• 산호초	62	220		58		5,797	6,075	375
• 대륙붕	2,660	68			1,431	111	1,610	4,283
○육상	15,323						804	12,319
－ 산림	4,855	43	3	87	361	475	969	4,706
• 열대림	1,900	32	8	87	922	958	2,007	3,813
• 온대림	2,955	50		87		165	302	894
－ 초지	3,898	67		87		78	232	906
－ 습지	330	256	3,800	4,177		6,552	14,785	4,879
• 연안습지	165	466		6,552		2,828	9,990	1,648
• 내륙습지	165	47	7,600	1,659		10,724	19,580	3,231
－ 호수/하천	200	41	2,117	665		5,675	8,498	1,700
－ 사막	1,925							
－ 툰드라	743							
－ 빙하/암석	1,640							
－ 경작지	1,400	54				38	92	128
－ 도시	332							
합계	51,625	1,386	1,692	2,277	17,075	10,836		33,268

자료 : Costanza et al., 1997: Nature

이며,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파급효과의 광역성은 육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강을 매개로한 관광 및 산업개발의 수요가 급증하는 곳을 개발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체 비용의 회수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성은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 주변지역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정체성을 거양하고,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는 금강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의 국가주도사업은 단지형태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과 고차서비스업 등 도시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주변지역의 상업적 경제적 기능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금강 살리기는 개발거점이 없는 선형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발거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강을 따르는 Blue-Network, 생태조성의 Green-Network 형성과 더불어 새로운 균형발전축을 설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쏠림 현상이 없는 골고루 잘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우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의 자족성 확보 측면에서 Blue-Network, Green-Network와 도시재생이 패키지화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차적으로는 광역교통 및 지역 간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거점 외의 소도시나 면 중심지는 자족기능 보다는 기초생활권 확립차원에서 기존 중심지와 연계기능을 도모하여야 한다.

각 거점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강변의 관광지를 수정·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별단위의 특화된 소규모 거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각 도시와 도시, 소규모 농촌거점과 거점을 매개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경관축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른바 금강변 경관가로를 조성함에 있어서 금강변을 따라 기존 도로 및 제방 보강시 또는 새로운 자전거도로 개설시에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가로를 금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조성하고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쉼터 등을 매개함으로써 일관된 스토리가 있는 금강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금강 주변지역에 접하는 읍면동으로는 총 3읍 22면 10동으로서 상류부터 금산군 제원면·부리면,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동부·우성면·이인면·탄천면, 청양군 목면·청남면, 부여군 부여읍·규암면·석성면·장암면·세도면, 임천면·양화면,

논산시 성동면·강경읍, 서천군 한산면·화양면·마서면·장항읍이다. 이중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공주시 동부와 부여군 부여읍, 논산시 강경읍, 서천의 장항뿐이다.

지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계획중인 사업 중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금강 살리기로 인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권오현,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배경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과 효과 세미나.
2. 김현주 외 2, 1999,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3. 이창희 외 12, 2004,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이창희 외 18, 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전승수, 2009, "하구역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서천군.
6. 한상욱, 2009,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추진방안", 금강 살리기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7. Costanza, R.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253-260.
8. 한국수자원공사,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9. 국토해양부, 2009,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계획 안내책자.
10. 기획재정부, 2009,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11. 환경부, 2008, 환경통계연감.
12.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13. 금강환경유역청 홈페이지, <http://gg.me.go.kr>
14. 한국수자원학회, <http://www.kwra.or.kr>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충남의 전략

김봉한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 서론

이명박 정부는 지역정책의 핵심개념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다. 지역개발정책의 기본적인 틀로서 "광역경제권"을 추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나타난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게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수도권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즉, 광역경제권 간에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와 연계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도 다른 광역경제권과 차이없는 대등한 관계의 광역경제권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수도권에 존재해왔던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억제되고 오히려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가중됨은 물론,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대형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지역산업벨트화 및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이 저해되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된다. 그리고 첨단기업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비수도권, 특히 충남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겠다.

2.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 및 파급효과

1) 배경 및 내용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토공간 측면에서는 다극분산형 균형발전 전략과 공간에서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전략을 실시하였다. 참여정부의 후기에는 수도권에 예외의 특례규제를 실시하는 수도권정책을 실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기초적으로 수도권의 기능분산과 지방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광역경제권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간정책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의 광역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지역정책의 기획·추진·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견제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국가발전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역개발정책의 기본적인 틀로서 "광역경제권"을 추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나타난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 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게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수도권도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광역경제권 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광역경제권의 특성화와 연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도 다른 광역경제권과 차이없는 대등한 관계의 광역경제권중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수도권에 존재해왔던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 신설·증설 및 이전에 대한 규제의 완화이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및 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는 완화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000㎡ 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

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증설 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의 완화이다. 경제자유구역·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도시형첨단산업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한다. 셋째, 환경보전을 전제로

〈표 1〉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내용 : 2008.10.30

항 목	주요내용
공장 신증설 및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완화 • 과밀억제 성장관리 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 내 공장 증설 이전 허용
공장 산업단지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에 의해 개발이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공장총량규제 배제 •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현행 연면적 200㎡에서 산집법에 의한 500㎡로 상향 조정 • 산집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 사무실 제외 • 서울시내 지식 문화 IT산업이 입주하는 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도시 지역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 허용
지역경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공공법인 사무소 신 증축 허용(지방이전대상 법인 제외) • 수도권 내 설립공장의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등록 이후 설립승인 이후) •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단 내 R&D시설은 면제 • 중첩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해 기타 규제 배제 • 수도권 창업기업 취 등록세 증과제도 개선(기본세율의 3배)
수도권 규제완화 이익의 지방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의 투자지원에 활용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완화이다.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안보·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기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며,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심의를 거쳐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증축을 허용한다. 그리고 수도권 내 설립되는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 시기를 앞당겨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 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 면제하고,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배)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한다.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즉,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먼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인구집중도는 80년에 35%였으나, 2000년 46.3%, 2005년 현재 48.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의 집중도는 20.9%로 나타났다. 경제 및 산업의 집중도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 말 현재 수도권지역은 총생산전체의 47.7%, 제조업체의 56.6%, 서비스업의 48.1%, 금융대출의 65%, 소득세수입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핵심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100대기업본사(95.0%), 대기업본사(88.5%), 벤처기업(71.2%), 조세수입 및 금융거래(70%), 기업부설연구소(71.2%), 공공청사(85.4%)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한 상태이다.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환경비용의 증대이다.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급증, 대기오염의 심화로 인해연간 약 4조원의 높은 환경개선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수도권 난개발의 심화이다. 수도권내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계획의 본질과 달리 개발되면서 도로·상하수도 및 하천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의 증대이다. 급속한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인해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이 1993년 2.9조원에서 2001년 12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가상승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2002년 전국의 지가총액 1,324조 원 중, 서울시가 390조 원, 경기도가 278조 원으로 수도권이 50.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가중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수도권이전은 지역첨단산업 관련 전·후방연계산업의 집적화기반을 붕괴시켜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충청권 경제의 입지를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형국책사업의 차질 및 지역경제의 침체이다. 첨단산업기반의 위축으로 인해 서북부권을 축으로 하는 지역산업벨트화 및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첨단기업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3. 비수도권 및 충남의 대응전략

첫째, 지역발전과 분권축진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정책을 지역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에 기초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역경제권은 복수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광역경제권의 개발계획수립과 지역 간 정책 및 사업조정, 사업성과의 관리 및 지원금에 대한 지자체간 배분 등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과거 중앙정부가 지역정책을 주도한 것처럼 기획재정부·지식경

제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제약되어 중앙정부 주도로 광역경제권정책이 실시되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자율형 추진기구가 광역경제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역권역별 발전을 주도할 광역권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별 특화기능설정과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인프라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42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과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실시된다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부지 매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급하고 법인세 감면

〈표 2〉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세제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외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 (법인세 5년간 100%, 양도차익 과세특례 등)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사는 신규부지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국고보조 및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시 50억원 한도내에서 국고지원 (지자체가 추가로 50억원 지원 가능) • 산업은행의 이전비 및 시설비 지원(시설투자비 90%이내) •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활성화자금 지원(20억, 5%, 8년)
토지공사의 종전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공장·본사사옥 부지를 토지공사가 매입 (대기업은 지방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이전부지의 용도 지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소재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대지는 용도 지역변경 허용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절차, 세제감면, 공장용지 아내, 자금융자, 이전부지의 매각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자료 : 건설교통부 D/B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면 지방이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시장접근성 및 물류비 애로, 지방입지 실익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지원 내용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의료 및 문화 등 정주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의 징수방식을 개선을 하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보조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기업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또한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 등으로 지방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경제권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의 세수확충을 유도하고, 이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의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는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기업본사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세수는 많지만, 단순 생산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방의 법인세 징수실적은 적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해도 법인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산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징수된 법인세를 활용하여 등록세·취득세의 감면과 창업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를 지역에서 징수하도록 세제를 개편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역 간 소득격차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괄적 보조금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충남과 경기도의 양 지역 모두에 기업 유치가 촉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에 충남(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 및 경기(평택시, 화성시 일원) 일원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충남과 경기도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 구역에서 충남과 경기지역의 개발이 서로 보완관계이므로 전후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양 지자체가 정책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충남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한무호 | 충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제 전망

지난해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상존해 있던 경제거품을 제거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만들어진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 불안 심화 → 주가 폭락과 신용경색 → 소비와 투자 위축 → 소득과 고용 감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또한 향후 실물경제 침체가 다시 금융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이 풍부한 저금리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가 급증하였고, 금융기관들은 대출분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경기의 침체는 개인들의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 감소로 부도의 가능성을 높여, 이는 다시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의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2.8%에서 4/4분기 마이너스로 하락하였고, 세계경제성장률은 1/4분기 3.9%에서 4/4분기 0.5%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른 금융 불안 완화와 경기부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실물경제가 2009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면서 U자형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8년 초반 성장을 위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달러화 약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성장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고, 이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져 급격한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를 겪고 있다.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4%, 전기 대비 -5.6%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정책당국의 유동성 지원 대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정책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은 일단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이 2007년 말 0.92%에서 2008년 말 1.46%로 상승하고, 어음부도율도 2007년 0.02%에서 2008년 말 0.04%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경색되어 있고,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한국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의 이중고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 말 예측했던 3.0%에서 -2.0%로 현대경제연구소는 3.1%에서 -2.2%로 낮추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선진국 경기침체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가들의 경기 둔화 확산으로 수출의 호조세도 크게 둔화되어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전조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의 경제위기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를 가져와 가계소득의 악화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은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의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생산과 고용의 축소로 이어져 고용빙하기의 도래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하고 있으며 고용사정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37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명이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다. 취업자는 2,28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3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실업률은 변함없이 3%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고용성과 부진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은 2009년의 경제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자 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안일한 전망에 대해 사과하기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미시노동지표를 분석하는 세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인수(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고용유지지원 인원 및 지원액은 전년동기대비 77%가 상승하였고, 12월에는 118%나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30% 증가하여 고용대란의 전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인수(2009)는 국책연구원들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초로 2009년 경제성장률을 1.3%로 예상했을 때도 취업자 증가는 -2만 명, 실업자수 92만 명,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수는 17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수연(2009)은 통계청의 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기본 자료로 '실질실업률'을 계산하였으며, 2008년 12월의 실질실업률은 11.6%로 공식실업률인 3.1%의 3배를 넘고, 실질실업자는 2007년 12월 278만 명에 비해 2008년 12월에는 302만 1천명으로 24만 1천명이 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3/4분기	3/4분기	3/4분기	3/4분기	11월	12월
수급자수	388,541	244,601	242,135	445,631	274,802	303,007
증감률	2.8	9.5	10.1	14.7	12.3	25.1
지급액	607,551	200,029	191,079	749,526	221,001	248,746
증감률	11.8	16.0	17.0	23.4	10.5	30.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최근 추세로 보았을 때 2009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2009년 1월 현재 실업자수는 이미 84만 8천명에 달했고, 올해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사 실업자도 4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대란의 문제는 과거 1998년 IMF위기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를

1) 실질실업률 = (실업자+18시간 미만 노동자 중 추가취업희망자+취업준비자+그냥 쉬고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자+그냥 쉬고 있는 사람)×100

비롯한 사회 전체가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98년 IMF위기 당시는 위기가 시작과 함께 빠르게 심화되었으나 세계경제의 호조건과 IT붐으로 상징되는 내수의 회복에 힘입어 빠르게 극복하는 V자형으로 단기고용안정을 주종으로 하는 단순고용전략으로 위기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어 경기저점 지속기간이 2년 내지 3년 이상 장기화되는 U자형 내지 욱조형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도 수출의 급감, 내수부진, 실업대란 등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2009년 1월 6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의 재정을 녹색뉴딜사업에 투자해 95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사업, 녹색사회 인프라 구축사업, 저탄소 고효율사업 등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9개 핵심 사업으로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18조원), 녹색교통망 구축(11조원),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등에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7개 연계사업에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27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기존의 녹색성장정책을 포함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적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은 사업의 핵심이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정부·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 등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표 2〉 핵심·사업 재정소요 및 일자리 창출규모

사업명		2007년			2008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기반영 (’09)	추가소요 (~’12)	계
합 계		43,626	456,866	500,492	93,360	863,060	956,420
핵심 사업 9개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 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연계 사업 27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8,529	33,038	41,567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3,236	11,310	14,546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827	19,073	19,900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2,959	5,639	8,59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253	1,955	2,208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	4,980	4,980	-	8,268	8,268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3,000	3,000	-	4,980	4,98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	760	76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	8,430	8,43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	7,767	7,767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171	1,281	1,452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1,700	5,700	7,400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431	5,570	6,001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42	154	19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	60	6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	575	575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2,853	21,519	24,3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582	4,343	4,924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	9,230	9,23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8,430	44,218	52,64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420	2,710	3,130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	10,030	10,03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	10,000	10,0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	1,332	1,332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	2,800	2,80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	920	92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	532	5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건설사의 기술, 관리직 3만5,000여명을 제외하면, 92만여명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단순노무직으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50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재정적자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가운데 건설과 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성격이 강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전 세계의 경기가 동반 하강추세가 가속화되고, 내수와 수출의 동시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 등 유효수요의 확대를 통한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이는 다시 소득증대로 이어져 민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케인즈학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통화의 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도 기업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기침체의 원인이나 경제주체들의 반응, 제도적인 요인 등 경제 환경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가 수요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자율보다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이 경제전망이 어두울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민간 투자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정정책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극심한 수요위축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정지출의 확대는 생

산과 소득의 증대를 통해 민간수요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재 등 외부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시차가 길게 나타나고,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시장기능이 배제된 정부의 선택이 비효율적인 부문에의 투자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재 투자 등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경우는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비효율적인 투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재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경기하강은 지난 수년간 과잉소비에 의한 고성장과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경제의 거품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간의 자생적 수요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기 전에 과도한 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개입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므로 부양책이 중지될 때는 다시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의 장기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경기부양과 동시에 경제성장잠재력 제고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3중고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단순노무직 중심의 단선적인 고용전략으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성숙이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녹색뉴딜이라기보다는 건설업 중심의 SOC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성장이 자동적으로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개발도상국시대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셋째,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평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고용전략의 비전과 계획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방안

전통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및 세계경제의 침체는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전개되어 내수부문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의 일자리 전망조차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침체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 및 수출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킴에 따라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구조조정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제조업, 영세 서비스업 그리고 비정규직 등 한계상황에 있던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고용 악화는 2009년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위적 인력조정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는 외환위기 시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회생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건설투자를 비롯한 공공사업 중심의 1930년대식 뉴딜이 아니라 인적 자원개발 투자와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뉴딜이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기업경영여건 및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충남의 산업구조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6년	
	부가가치액	구성비	부가가치액	구성비	부가가치액	구성비
전 국	438,016,770	100.0	514,658,056	100.0	677,541,005	100.0
1차산업	22,638,824	5.2	23,750,741	4.6	23,272,731	3.4
2차산업	115,433,855	26.4	151,029,545	29.3	221,275,690	32.7
3차산업	299,944,091	68.5	339,877,770	66.0	432,992,584	63.9
충 남	18,762,587	100.0	25,782,995	100.0	39,489,518	100.0
1차산업	2,654,037	14.1	3,157,719	12.2	3,197,127	8.1
2차산업	5,252,191	28.0	10,081,660	39.1	18,830,555	47.7
3차산업	10,856,359	57.9	12,543,616	48.7	17,461,836	44.2

주 : 2000년 기준 불변가격

충남경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는 1995년~2006년 사이 2차산업의 비중은 25.1%에서 41.6%로 증가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1차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농업이 지역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 음식료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순으로 특화되어 있다. 충남의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역규모는 509억7,700만불로 전국의 8.6%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수출은 300억5,9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고, 수입은 209억1,8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하였다.

충남지역의 경제현황은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 주력산업인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수출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 급감에 따른 영향이 타 지역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시장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한 금융정책 실패의 결과였다. 깊어가는 경제위기를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금융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지식주도의 경제로 나아가야 하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비수도권간 동반성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단기적 일자리 창출 중심의 단선적인 고용전략보다는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합고용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 대한 고용유발효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창출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또한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쟁력의 취약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동시에 해당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그리는 능동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실용주의적 복합고용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야 한다.

과거의 소품종-대량생산방식 하에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다품종-소량생산방식 하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강한 일본, 독일, 대만 등은 외부의 충격을 비교적 잘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기술진보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이에 적시에 부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건설업 등 SOC 투자보다는 융합산업 및 녹색성장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에 투자 비중을 높여 국가의 중장기적 경제성장잠재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국가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재정지출 확대인 만큼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에 투입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자동차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의 집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부품이나 원천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 및 글로벌 공급기지화 구축,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연계 강화,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협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핵심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역량 축적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의 고도화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핵심인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와 더불어 숙련된 인적자원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

고, 이들 인적자본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도 단기적 실업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인적자본 보존과 축적을 위한 투자를 병행해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만성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전문 인력과 기능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를 중심으로 실무형 기능인력 양성,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제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 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역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시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체계의 부재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및 성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비되어 유효한 정책을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지역사업들에 대한 종합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위기에서 타격을 받을 대상이 취업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근로자, 여성·청년, 고령자 및 자영업자에 치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촉진을 위한 지역고용인프라의 실질적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실직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진보의 가속화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되고 많은 전통산업들이 사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고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평생학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2009. 1.
2. 송태정 외, "글로벌 경제, 위기 수위 높아지나," LG경제연구원, 2008. 12.
3. 이근태,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 LG Business Insight, 2009.
4. 이수연, "실질실업자 300만명 돌파, 실질실업률 11.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9. 1. 22.
5. 전병유,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고용전략,"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7.
6. 전용일·김주섭,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의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1.
7. 전재영 외,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 2009. 1.
8. 정인수,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2009. 1.
9. 조준모,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선진국의 복합고용전략과 한국에의 시사점,"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2009. 1.
10. 허재준 외,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 1.
11. 현대경제연구원,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주평, 2009. 1. 23.
12. 현대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위기극복 핵심과제," 한국경제주평, 2008. 12.
13. 황인성,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 2. 11.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충남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전병관 | 아산시청 비서실 팀장

1. 서 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살아가려 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가 국가라는 영역 내에서만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지역 내 역량과 국가가 위임한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보다 외부 환경에의 적응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환경은 국외적으로 외국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적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이나 외국 자치단체간의 교호작용은 국제교류로서 표현되고,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 동급 자치단체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것은 국내교류로 표현된다(허훈, 2008: 91-92).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조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사람과 상품, 자본, 정보, 문화 등이 상호 교환되고,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차원에서의 국내외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형태로 교류협력을 맺는 경우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체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능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 민간단체, 지역대학, 기업 등에서

지역의 수요와 창의에 따른 교류협력정책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국내외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상호이해와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공무원교류, 문화예술교류, 스포츠교류, 교육교류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어느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나아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 아산시 교류협력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교류협력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란 어떤 지역이나 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자치단체를 서로 돕기 위하여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으로써 국내외 자치단체 상호간에 제휴하여 그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대 및 친선교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체결이다. 자매결연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집단이 다른 지역이나 단체 또는 집단과 친선이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이다(동아새국어사전).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자매결연도 국어사전의 풀이와 다르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해당 관할구역내의 공공복리의 발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때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은 "다른 자치단체 등과 상호공동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문화·행정·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매결연이 맺어지려면 양측간에 공동관심사가 있고, 공동발전을 위한 행동의 약속과 실천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이때 확인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명행위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약문서로 자매결연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친선교류의 의사를 주고받는 우호교류 혹은 우호도시는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우호교류가

'친구사이'라면 자매결연 교류는 성숙된 협력관계로 볼 수 있다.

Yep(1974)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조직의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개별적인 자치단체로서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내부적 역량의 한계 특히, 재원부족과 기술적, 기능적 전문성 취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사업연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치단체간 상호 비교우위를 조화롭게 접목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이나 협력사업 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교류협력의 유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유형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도시 간 친선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참관 등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와 스포츠 교류, 개별적 목적에 따른 경제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양 도시간의 상호호혜적인 위치에서 추진하여야 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로 추진하여 교류

자치단체간의 실익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장점을 타지방자치단체의 장점과 교환을 전제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정서, 경제, 자연 등의 교류자원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교류자원이 상대방 자치단체에 비하여 유사할 때와 유사하지 않을 때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맺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이 상대방과 유사한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를 얻기 위해 교류가 발생한다. 둘째, 상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원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교류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자원의 종류와 소유하는 자원의 유사성의 유무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아산시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유형화를 시도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 문화, 경제 등의 교류자원이 유사한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분야별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역사교류형, 문화마케팅형, 네트워크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경제, 교육 등의 교류자원이 유사하지 않은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교환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도농교류형과 교육

교류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사례와 장점을 살펴보면, **I 유형** : 역사교류형은 동일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가진 자치단체가 상호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로 이순신장군의 역사성에 기초하여 이충무공 묘소 및 현충사가 위치한 충무공 이순신함과의 자매결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교류형은 역사성에 근거한 특정정신의 계승 발전과 문화교류를 테마로 유적지를 상호 보존하고 지역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와 친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유형** : 문화마케팅형은 문화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를 계기로 여러 자치단체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화축제, 문화체험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형태로 아산시는 성웅이순신축제를 발전시키고, 진주시는 진주논개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정보교환, 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벌여나가면서 관광객 등의 증대에 기여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문화마케팅형은 상호간의 문화 강점이 있고, 이를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상호이익이 되

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III 유형** : 네트워크형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나 당사자가 두 자치단체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하며 교류관계가 네트워크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¹⁾ **IV 유형** : 도농교류형은 도시와 농촌에서 경제력이 다른 자치단체 간에 상호발전을 위해 결연을 맺는 경우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와 농산어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대부분이 이 형태를 띠고 있다. 아산시와 서울 서대문구간에 자매 결연을 맺어 농촌 체험탐방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농교류형은 농촌의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품 등을 도시자치단체에서 구매하여 주고, 농촌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및 농촌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V 유형** : 교육교류형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아산시와 도시 전체가 대학촌을 이루고 있는 미국 랜싱시·이스트랜싱시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아산시에서는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과정

1) 대표적인 것은 1998년에 결성된 Network자매도시이다. 같은 해 2월에 경남 고성군의 제창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자매도시를 결성하였다. 이들 네트워크형태의 자매도시 결연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화합을 모토로 대구 유성구가 제창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형태로 결성되었는데, 각 광역별로 1개 자치단체가 우수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어 교차 결연을 맺고 있다. 우수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모호하지만, 자치단체간 발전연대에 대한 귀중한 실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자치단체는 서울 도봉구, 부산 남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기 의왕시, 강원도 평창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무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포항시,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이다.

〈표 1〉 아산시 교류협력의 유형

구 분		교류자원의 성격	
		유사	비유사
교류자원	역사	I (역사교류형)	
	문화	II (문화마케팅형)	
	경제	III (네트워크형)	IV (도농교류형)
	교육		V (교육교류형)

자료 : 허훈 (2008: 104). 참조 재구성.

및 랜싱커뮤니티컬리지 ELCC과정 등에 영어 연수를 실시하고, 울즈자동차공장 등 자동차 개발의 주요 도시인 미국 랜싱시·이스트랜싱 시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와의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3. 연구의 범위와 분석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충남 아산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아산시와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아산시를 분석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아산시가 국내 5개 자치단체 및 국외 5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교육, 경제, 도농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영어연수를 포함한 유학프로그램

등 교육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2008. 12월 현재까지로 하였다. 1995년을 연구대상의 시발점으로 한 것은 이때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의 내용적 범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아산시의 국내·외 교류협력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토대로 조직 및 인력, 예산에 대한 구조적 실태와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내용을 토대로 한 기능적 실태를 분석하여 교류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 활성화 방안에서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인력의 전문성 및 예산확보를 위한 구조적 측면과 교류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교류체결의 적정성

등 기능적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태분석은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 특성까지 가능한 모든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정책수행에 필요한 구조적 특성과 교류협력 정책의 실제 운용 결과라 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구조적 특성에서는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능적 특성에서는 교류협력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내용을 물적 교류와 비물적 교류 등으로 구분하여 얼마나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교류와 농업교류의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

Ⅲ.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

1. 국내외 교류협력의 운영실태

1) 교류협력의 현황

아산시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5월 중국 요녕성 보란점시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도에는 경남 진주시, 2005년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여주군,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유주시, 2006년도에는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스트랜싱시, 2007년도에는 경기 성남시, 전북 남원시,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시,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완자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²⁾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중점 교류분야는 국내의 경우 대부분이 문화예술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외 교류의 경우에는 영어교육 등 교육교류 등에 비중을 두어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아산시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는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여건이 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자치단체 외에도 아산시에서는 경남 진해시 해군 제5전단 충무공이순신함과 '05년 4월 충무공 정신의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표 2〉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현황

구 분	체결도시	체결일자	체결형태	중점 교류 분야
국 내	경남 진주시	'04. 6. 11	자매결연	문화예술, 축제 등 문화교류
	서울 서대문구	'05. 6. 3	자매결연	교육, 문화, 농축산물 거래 등 도농교류
	경기 여주군	'05. 11. 17	자매결연	도예 문화의 교류
	경기 성남시	'07. 3. 9	자매결연	문화, 선진행정, 농축산물 거래 등 도농교류
	전북 남원시	'07. 11. 19	자매결연	소리 문화의 교류
국 외	중국 요녕성 보란점시	'97. 5. 20	자매결연	경제, 문화 교류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유주시	'05. 6. 3	우호교류	경제, 문화 교류
	미국 미시간주 랜싱시·이스트랜싱시	'06. 2. 14	우호교류	교육 교류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시	'07. 4. 26	우호교류	교육, 문화 교류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완자시	'07. 10. 22	우호교류	농업, 보건 교류

자료 : 아산시 내부자료.

교류를 체결하게 된 동기는 양 지역 자치단체의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사나 상대측 및 우리측 제안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2개 도시와의 우호교류 체결은 모두 교육 관련 특정인사의 소개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대부분 상대측 혹은 우리측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것은 자매결연이 양 도시간의 상호 보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맺어지고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된 주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 도시인 진주시는 진주논개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의 교류를 목적으로, 서대문구는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위치하여 교육이 발전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거리 축제인 신촌문화축제 등이 펼쳐지고 있는 도

시로 교육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교육·문화 교류의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여주군은 여주도자기 박람회를 통하여 도예 문화의 교류 목적으로, 남원시는 남원농악 등 민속축제와 춘향제, 판소리 등 소리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리고 성남시는 도시개발, 문화, 복지, U-City성남 프로젝트 등 선진행정과 성남리빙디자인페스티벌 등 문화와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외국 도시인 중국 보란점시는 경제개발지구로 4,000여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광물, 농·축·수산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유주시는 자동차산업과 기계부품산업을 기반으로 중국 남부대륙 최고의 첨단공업도시로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미국 랜싱시·이스트랜싱시와 타일러시는 영어교육 등 교육교류를 목적으로, 아프리카 무완자시는 문명과 개발의

소외지역으로 농업기술 등 원조차원에서 농업 교류의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2) 교류협력의 구조적 특성

교류협력의 구조적 특성을 조직 및 인력,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업무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추진하여 오다가 지난 2005년 6월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국내외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하여 하고 있다. 총무과 대외협력팀에는 대학에서 국제학이나 외국어 등을 전공한 자 중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영어능력 우수자 2명과 중국어 능력 우수자 1명 등 교류협력 업무에 적합한 전문기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외협력팀의 예산은 8억원으로 전체 시 예산 5,873억원의 0.001%에 불과하며, 특히 대외협력팀 예산 8억원 중 7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공무국외여행 여비로서 순수한 교류협력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열악한 예산 확보로 인하여 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단기적·부분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적 지표와 중소도시의 상대적 쇠퇴정도 비교, 공무원의 식조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등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도시를 제외하고는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마저도 도시내부쇠퇴를 염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구도심내 상점가, 주거지 등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었다.

3) 교류협력의 기능적 특성

자치단체간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주로 그 성격에 따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적 교류와 비물적 교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매결연 후의 상호간의 물적 교류는 아직까지는 상호공동개발, 상호공동시설의 활용이나 개발과 같은 형태보다는 도농교류의 양식을 보여주는 직거래장터 등과 같은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대방 자치단체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도농교류인데, 이는 도시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만들어낸 호혜적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적 교류 중에서 양 자치단체간의 기업 간 교류나 경제적 협력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자매결연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물적 교류는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교류는 직원파견, 스포

츠교류, 민간단체교류, 교육교류 등을 의미하며, 문화교류는 지역축제참가나, 문화사절단 등을 파견하여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직원파견을 통한 인사교류는 상호간의 행정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정보공유를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나, 자매결연 후 협력 내용 중 직원교류는 단 1명만이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주로 상대도시의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스포츠교류나 문화교류는 자매결연 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며, 특히 상대 자치단체의 축제나 문화행사에 시립합창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교류 중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 우호도시대학에 영어연수 등을 통한 교육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과정 및 랜싱커뮤니티컬리지 ELCC과정 등에 영어연수를 실시하여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민간단체 주체로 타일러시 YWAM과 아산시기독교연합회 공동으로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실시하는 등 상호간 교육교

〈표 3〉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내용 분석

구 분	물적교류	비물적 교류					
	직거래장터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민간교류	교육교류	공무원 파견	지역축제	문화행사
교류 내용	자매결연 도시에 직거래장터 운영	축구, 테니스팀 등 교류	부녀회 등 교류	우호도시 대학에 영어 연수	우호도시 시청에 공무원 파견	지역축제 참가	문화행사에 문화 사절단 파견
교류 사례	성남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매년 운영	진주시 축구협회 및 테니스동우회 상호친선 경기	서대문구 부녀회 및 여성단체협의회 상호방문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과정 및 랜싱 커뮤니티컬리지 ELCC과정 영어 연수, 타일러시 YWAM 소속 초·중학생과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소속 초·중학생 상호간 영어캠프 운영	랜싱시의 벤치마킹 및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과정 연수 생 지원을 위해 공무원 1명을 랜싱시 청에 파견	진주시 논개제 및 유등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미국텍사스주 타일러시 장미 축제 등에 참여	진주시, 남원시 등에 시립합창단 파견 연주회
교류 유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문화마케팅형	

자료 : 아산시 내부자료.

〈 사례 〉 교류협력 우수사례

■ 교육교류

-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 과정('06. 02. 14 협약체결)
 - '07. 6. 9에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 과정에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입학하여 수료
 - 10명 수료자 중 4명이 미시간주립대학교에 편입학
- 미국 랜싱시 중학생 영어 연수('06. 10. 14 협약체결)
 - 랜싱시 교육청 주관하에 여름방학을 이용 3주간 중학생 20명이 '07. 7. 23 영어연수 참여
- 랜싱커뮤니티칼리지 ELCC 과정('07. 11. 14 협약체결)
 - 집중 영어교육 과정인 랜싱커뮤니티칼리지 ELCC과정에 '08. 3. 12에 17명 입학하여 연수

■ 농업교류

- 아산시와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완자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07. 10. 22)
 - '08. 6. 17일 무완자시 농업인 6명을 초청하여 6개월간 농업교육 실시

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기 드문 교육교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교류가 활발히 성공적으로 추진된 데에는 아산시공무원 1명을 '07. 2월 랜싱시청에 파견하여 미시간주립대학교 VIPP과정 연수생 지원 및 랜싱시의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한 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완자시의 농업인 6명을 초청하여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교육을 6개월간 시킨 것도 인적교류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교류 우수사례는 아산시 입장에서의 목표달성에 의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농업교류 우수사례는 문명과 개발의 소외지역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대한 원조차원에서의 특수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국내외 교류협력의 문제점

1) 교류협력의 구조적 문제점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의 증가에 따라 전담 부서인 대외협력팀을 신설하고,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대졸 이상의 전문직원을 배치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언어능력을 구비한 전문가 양성이 언어 영역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 감각

이 풍부한 통상전문가 등의 인재 발굴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 예산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매·우호도시간의 이해증진과 정보·문화교류 등을 위한 인적·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주최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교류가 미흡한 실정이다.

2) 교류협력의 기능적 문제점

우선, 계획적인 사업추진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기관장 등 지역인사들의 관광차원의 친선방문 등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상호방문 공연 등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양 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에 의한 공동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부적절한 결연 및 교류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양 자치단체 간 산업·문화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관계등 상대도시에 관한 충분한 여건을 검토하지 못하고, 사전적 교감이 형성되지 않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협력이 미진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상대도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부진한 교류상태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보람점시

와 유주시의 경우 상대도시의 소극적 대응 뿐만 아니라 상대도시에 대한 사전 교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가 부진한 실정이다.

셋째,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체결이 부진하다. 아산시의 경우 온양온천 등 3대 온천이 존재하고 아산신도시, 아산테크노벨리 등이 대단위로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유명한 일본자치단체등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류영역이 어느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교류협력의 유형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첨단산업 등의 경제부문이나 복지, 체육부문 등에서의 교류협력 유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케팅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등에 교류협력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정의 교류협력이 부진하다. 아산시의 경우 컨벤션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 아직 건립되지 못하여 대단위 문화행사나 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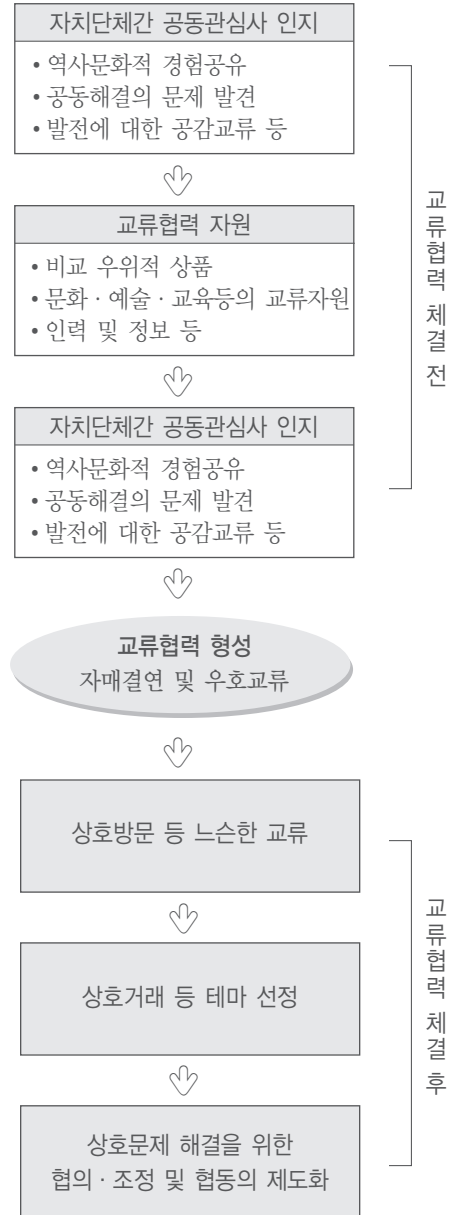
Ⅳ.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매·우호도시와의 더욱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역사가 짧아 속단할 수는 없으나 일부 자매·우호도시와는 협약체결에 조인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과정에 의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즉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관계설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동기가 양 자치단체 쌍방 모두의 호혜적 상호발전이며 이것은 양 당사자간의 공동문제의 인지, 교류협력 자원의 탐색,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제

〈그림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전·후 기본방향



도적 역량을 통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이 맺어지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시작된다(허훈, 2008: 109-11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방문 등의 느슨한 교류 → 상호거래 등의 자원이나 테마 설정 → 상호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여 협의·조정·협동의 단계로 발전 → 상호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의 제도화 단계로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교류협력의 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이미지, 상징성 등을 반영하여 교류협력의 특성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개성과 고유의 특색과 문화 등을 살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³⁾

셋째,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주민이나 민간단

체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교류협력의 운영 활성화 방안

1) 교류협력의 구조적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류협력 추진체제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교류협력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희망 등에 따라 국내외 교류협력에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하여 필요시 교류협력전담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교류협력 전문가 pool을 만들어 보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교류, 국제통상 등의 전문가는 외부에서 초빙하되 국제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사단체의 전·현직자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교류협력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다양한 전문교육과 체계적인 해외연수, 공무원 파견 및 교환근무, 외국어교육 등 실용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3)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삿보르 눈축제, 영국의 에딘버러축제,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경기 세계도자기 엑스포,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을 들 수 있다.

추진하고 있는 자체 교육계획에 교류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의 초·중급 영어회화반 외에 일어, 중국어 회화반 등을 개설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⁴⁾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안정적인 예산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교류협력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교류협력비 예산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확보하되, 최소 전체 시 예산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민·관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 얻고 지역주민의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교류협력의 기능적 활성화 방안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기 위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획을 연도별, 분기별, 월별로 구분하여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으로 수립된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며, 내부통제는 교류협력업무의 구체적인 성과와 더불어 추진이 부실한 요인을 분석하는 성과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제고시키고 교류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교류협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민간 컨설팅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외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 보고 그 타당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교류협력의 시행 과정에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한 중간성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하는 것은 국내외 교류협력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류협력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 등을 특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국 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체결

4) 아산시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전문교육으로 도시디자인과정(토목, 건축, 녹지, 지적, 도시계획직 등), 도시마케팅과정(6급 이상 간부 등), 문화예술기획과정(6급이상 간부 등), 맞춤형 공개강좌(전직원을 대상으로 둘째, 넷째 금요일 16:00~18:00까지 산림정책, 도시재생, 문화관광정책 등의 내용으로 2개 강좌씩 공개강좌 실시) 등을 자체 교육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학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은 순천향대학교와 선문대학교에 위탁하여 각각 10명씩 초·중급 영어회화반을 매주 4일씩 운영하고 있다.

이 필요하다. 아산시의 경우 온양온천 등 3대 온천을 특성화시켜 관광마케팅하고 산단 조성 과 연관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유명한 온천지역이 있는 오오이타현 뱃부시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자동차산업의 메카인 아이치현 도요타시 등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이 될 것이다.

넷째, 유형별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지역의 핵심 사업이나 지역의 특정 관심분야 등의 영역에서 균형있는 교류를 하 여 지역사회부문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아산시의 경우 현재의 문화 마케팅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등의 교류 협력에 더하여 첨단산업 등의 경제부문이나 복지, 체육 등의 부문으로 유형별 교류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정에 의한

〈표 4〉 아산시 교류협력의 유형

구 분		분석요소	교류자원의 성격
구조적 요소	조직과 인력	인력의 전문성	· 교류협력 전문가 POOL에 의한 보직관리 · 국제교류, 국제통상 등의 전문가는 외부 초빙을 통한 채용 · 국내외 교류협력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실용 교육 추진
	예산	예산확보	· 중장기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한 예산 확충 · 국내외 교류협력비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 확보 · 민간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민간자본의 투자방안 모색
기능적 요소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계	교류사업의 계획적 추진	· 연도별, 분기별, 월별 등의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운영 ·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성과감사 추진
		교류체결의 적정성	·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한 교류협력의 타당성 검토 및 중간 평가 실시 ·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교류협력의 특성화	· 온천과 산업단지 등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체결
		유형별 교류협력의 확대	· 문화관광, 도농교류, 교육, 경제, 복지,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된 유형별 교류협력의 확대
		협력과정이론에 의한 교류체결	·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물의 공동 이용과 같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공동해결 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교류협력 체결
		교류협력의 제도화	·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교류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공동해결 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교류협력 체결이 필요하다. 아산시의 경우 컨벤션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하는 방안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에 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성과감사, 민간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방안, 교류영역, 주민참여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 규정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V.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매결

연 및 우호교류 체결의 목적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음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시에 의도했던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교류협력의 목적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동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호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협력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문화적 교류, 교육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과 교육 등의 상호발전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특산물 판매 등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직 인사교류나 상호문제해결형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내외 교류협력의 효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은 하나의 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연을 넓히고 내포를 발전시키려는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인 충남 아산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류협력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교류협력의 목적과 내용, 교류유형 등

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지만, 교류협력의 성과와 해당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권희재·사득환·김장기(200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지역개발연구』, 제10호: 35-56.
2. 김영현·유지태(2000),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연구보고서』.
3. 김선기·한표환(2003),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권2호: 107-126.
4. 박용래(2006),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사득환(2002), "정부간 관계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권1호: 123-144.
6. 성태규·문희철·정연정(2006),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대전: 충남발전연구원.
7. 신희권·이신우(2001),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필요성과 실태분석", 충남대학교, 『지역개발논총』, 13집: 137-171.
8.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9. 윤두용(2006), "우리나라 도농교류실태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윤용섭(199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2집: 203-224.
11. 이은재(1999),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촉진", 『지방의 국제화』, 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2. 이정주·최외출(200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과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권2호: 145-161.
13. 이현진(200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1),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매뉴얼』.
15.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2007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16. 허훈(2008), "국내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권1호: 91-113.
17. Yep, Benjamin(1974), An Elaboration of the Concept of Coordination in Interorganizational Research. IA: Iowa State Univ. Press.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의 시사점¹⁾

양도식 | 영국어반플라즈마연구소장
조봉운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영국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동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제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한 세기 동안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 되었으며, 현재에는 지역적 현안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향상과 도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중소도시인 버밍햄, 브리스톨, 맨체스터의 사례를 통해 도심·문화·산업재생의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배경, 주요전략, 성과,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영국도시재생사업의 변천과 현안

영국 도시정책(도시재생정책)은 ‘도시화·산업화’의 과정과 ‘탈도시화 탈산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과 방법들이 이루어졌다. 크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의 기조는 ①주택과 공공보건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public health) → ②슬럼제거(slum clearance) → ③도시재건설(reconstruction) ④도시재정비(urban renewal) → ⑤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 → ⑥도시재생

1) 본 연구는 2009년 2월 18일 “지방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세미나”의 발제 자료인 “영국의 지방도시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와 전략”(양도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urban regeneration) → ⑦도시부활(urban renaissance)로 진행되어 왔다.

도시재생 정책의 개념에서 본다면 도시의 문제지역의 철거(Slum Clearance) → 물리적 건설(reconstruction) → 물리적 재보수(renewal) → 경제적 접근(redevelopment) 사회적 · 경제적 접근(regeneration) → 문화적

접근(renaissance)의 도시재생정책으로 크게 변천하였다.

이러한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천과정에서 일괄되게 나타나는 것은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초기에는 더욱 더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①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②지방정

〈표 1〉 현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도시재생전략을 담은 'Nation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ies'(2001)에 나타난 도심재개발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 방안 제시의 예

이해당사자의 타입	역할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National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재개발정책의 골격과 방향을 작성 •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nizing Local Government Finance: A Green Paper' 발간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체계의 변화 도모 • 지방정부가 정부의 재정규칙과 일관성 그리고 적당성에 부합되면 재정사용에 있어 유동성 제공 (from borrowing controls to prudential system 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역기구 (Regional Organisations) •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Government Offices for Regions • Regional Planning Conferences • Regional Assemblies/Cha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역의 현안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ional Co-ordination Unit 중앙 정부에 설치를 통한 통합적 접근 • 이를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Local Auth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는 도심재개발 (혹은, urban renaissance)의 주도적 역할 • 커뮤니티계획의 핵심 • 지역 커뮤니티와 자발단체 그리고 민간 섹터와의 긴밀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의 이양 • 장기적인 펀딩 지원 • 자금은 확보하고 쓰는데 있어 자유 부여 •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 Local Strategic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커뮤니티와 근린 (Local Communities and Neighbour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와 근린지역은 도심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 • 지역의 도심재개발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한 커뮤니티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부(local government), ③민간섹터(private sector), ④자발단체(voluntary sector)와의 관계는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 2〉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의지를 담은 핵심 정책과 문서

문 서	문서의 주요 내용
•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장기기반적인 핵심 도시재생전략 • 아래의 프로그램들의 배경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 Deal for Communities -Education Action Zones -Sure Start -Neighbourhood Renewal Fund -Employment Zones -New Start -Health Action Zones
• A Towards Urban Renaissance(DETR,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chard Rogers의 Urban Task Force에 의해 작성됨 • 도시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
• 자치구 (Local Auth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 현안과 연계한 도시정책 제시 • Urban Renaissance 관련내용을 담은 정부백서
• Bring Britain Together (SEU, 2001)	• Nation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 자치구 (Local Auth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성장계획 제시 •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 사회 양극화 최소화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 • 낮은 주택수요 지역에 대한 문제 접근
•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ODPM,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전략 • 잉글랜드 북부와 이외의 지역 사이 29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변영의 격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
•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ODPM,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개발계획을 대치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의 도입의 배경이 된 법령 •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 UDP와 Local Plan을 Local Development Frameworks로 대체함 • Structure Plan을 Regional Spatial Strategy로 대체함
• Egan Review(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Skill)에 대한 검토 • National Centre for Sustainable Community Skills 설립
• Sustainable Communities: Homes for All (ODPM,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저가의 서민주택 공급, 기존의 주거환경을 향상, 침체된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한 5년 계획
• Sustainable Communities: People, Places and Prosperity(ODPM,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역정부와의 협조하에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운영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5개년 계획 • 침체된 근린문제 해결과 지역의 변영 조성
• State of English Cities(ODPM,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56개 주요도시(인구 125,000 이상)의 상황과 12개 주요사례도시에 대한 연구결과 기술 • 선례가 없는 규모와 상세한 내용을 담음.

점은 현재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정부의 정책적 기조라는 것이다 <표 1 참조>.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있어 지방의 자치적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결국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지방정부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재생을 위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가장 핵심은 살만하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중심을 둔 도시재생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문화적·디자인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2 참조>.

3. 영국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사례연구

3.1 버밍햄 도심 문화상업지구 도심재생

버밍햄 시는 잉글랜드의 중부에 위치한 지

역의 수도(regional capital)이며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18세기 이후 산업도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한 버밍햄 시는 2차 대전 이후 도시재건 사업이 이루어졌고, 1960년대는 전형적인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이루었다. 1970년대는 영국의 많은 대도시처럼 제조업의 쇠퇴와 실업은 버밍햄 시의 침체로 이어져 1971년과 1983년 사이 실업률이 29%가 증가하였다(Corbett, 2004). 1980년대 후반 이러한 도시의 침체에 위기를 느낀 버밍햄 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가 택한 첫 시도가 자동차 중심의 분절되고 침체된 산업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과 공공공간으로 바꾸려는 도시디자인적 접근이었다는 점이다.

국제적이고 지역의 중심 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버밍햄의 첫 번째 노력은 기존 도심의 ①물리적인 구조의 재정비를 통한 ②도시 이미지 변모와 ③정체성 확립을 위한 'City Centre Design Strategy'(1990) 작성이었다. City Centre Design Strategy 도시디자인 문서는 버밍햄 도심을 시티센터를 중심으로 7개의 지구(quarters)인 ①City Centre Core, ②Greater Convention Centre area, ③

Jewellery Quarter, ④Chinese Quarter and Markets Area, ⑤Gunsmiths Quarter, ⑥Aston Triangle, ⑦Digbeth Millennium Quarter 로 나누어 지구별로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지침을²⁾ 단계적으로 작성하였다. City Centre Design Strategy는 도심과 도심 주변의 순환도로를 이어주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누어진 도심의 ‘접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고가도로의 ‘지면화’와 ‘터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도심에 연속된 보행로를 따라 양질의 도심광장을 조성하여 도심의 정체성과 사람중심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년간 버밍엄 시가 이룩한 도시의 부활(urban renaissance)의 중심에는 도심 서쪽지역의 ①브린들리플레이스(Brindleyplace)와 동쪽지역의 ②불링(BullRing)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각각 ‘Westside Story’와 ‘Eastside Story’로 버밍엄 시는 소개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행화된 가로체계를 통해 연결되어 버밍엄의 도심공간의 ‘장소성’을 창출하고 버밍엄 시의 ‘도시 정체성’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브린들리플레이스(Brindleyplace)를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Westside Story’

브린들리플레이스는 역사적으로 산업지역이었으며, 영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산업의 쇠퇴로 인해 버려진 산업유휴지가 발생되었다. 버밍엄시는 City Center Design Strategy를 바탕으로 한 Westside story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례인 1987년 브린들리플레이스의 산업유휴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실제적인 마스터플랜은 1992년 작성되어 1993년 공식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버밍엄 시가 추진한 Westside Story 도시재생사업은 보행로와 공공공간을 문화·상업시설과 연계하여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보행과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중 브린들리플레이스 도시재생사업은 버밍엄 도심의 뉴스트리트역(New Street Station) → 뉴스트리트(New Street) → 빅토리아 광장(Victoria Square) 챔벌린 광장(Chamberline Square) → 센티너리 광장 (Centenary Square) → 브로드 스트

2) 버밍엄 시가 지금까지 작성한 지구(quarter)별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지침서는 다음과 같다. Convention Quarter Framework (September 1994), Digbeth Millennium Quarter Framework (November 1996), Bullring and Markets Quarter plan (March 1996), Gun Quarter Study (April 1993), Jewellery Quarter Urban Village Study (November 1998)

리트(Broad Street) → 브린들리플레이스와 광장(Brindleyplace) → 운하수변공간 → 메일 박스(The Mail Box)로 이어지는 ①보행자 네트워크와 ②양질의 공공공간과 함께 연계된 ③컨퍼런스, 문화, 레저, 관광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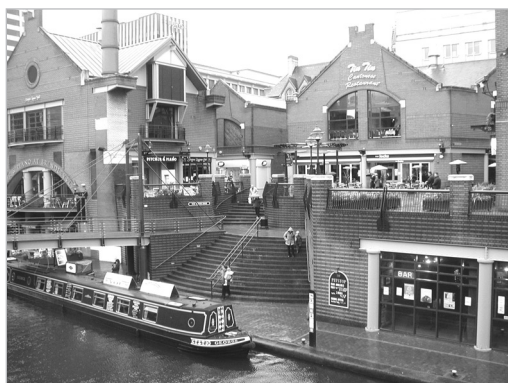
브린들리플레이스는 1992년 작성된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운하수변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공간, 호텔, 레저시설, 컨벤션센터 등 높은 수준의 도시건축디자인과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시설을 바탕으로 브린들리플레이스는 1998년에 G8정상회의 유치하여 버밍햄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영국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국제 컨벤션을 유치하는 도시가 되었다.

브린들리플레이스 도시재생사례의 성공요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밍햄 도심과 독립되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문맥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된 점이다. 이는 버밍햄 시가 1980년대 자동차 중심의 산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도시 계획·디자인 전략 ‘City Centre Design Strategy’ 방향과 도심을 둘러싼 지구(quarters)와의 연계를 중요시 하는 버밍햄 시의 도시디자인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복합용도 개발이다. 사무공간, 주택, 소매점, 레스토랑, 카페, 문화 레저시설은 다양한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특히 연간 2백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수족관(National Aquarium)과 같은 상징적인 문화시설과 연계된 상업 환경은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



〈그림 1〉 브린들리플레이스의 운하수변공간(The Water Edge)와 중앙광장(Central Square)

불링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Eastside Story' 도심재생사업

불링은 12세기부터 형성된 상업과 마켓지역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의 버밍햄 시의 쇼핑 중심지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쇼핑센터가 조성된 전형적인 마켓과 쇼핑지역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구불링 쇼핑센터는 쇠퇴로 접어들었다. 버밍햄시는 Eastside Story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후반 구불링 지역에 대해 새로운 불링 쇼핑센터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불링은 'Bullring and Market Quarter: Planning and Urban Design Framework'의 지침서에 따라 2000년 7월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03년 공식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마쳤다. 2003년에 완료된 불링쇼핑센터는 개장 첫째 3천 6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한 성공적인 불링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버밍햄 Eastside



〈그림 2〉 완료된 불링 도시재생사업 지역과 랜드마크 건물인 셀프리지 건물의 모습

Stroy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다(그림 2). 이후 불링은 세계적인 쇼핑센터로 자리를 잡은 동시에 제조업과 산업의 도시 버밍햄의 이미지를 문화와 쇼핑중심지로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구불링 지역의 연계와 보존은 쇼핑과 레저 그리고 관광을 함께 동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불링 지역을 감싸고 있던 도로를 지중화한 버밍햄 시의 혁신적인 도시디자인적 접근은 버밍햄을 상징하는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만들었다.

불링 사례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밍햄 시 차원의 확고한 비전과 리더십이다. 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산업과 제조업의 도시에서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와 상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의 노력은 현재의 버밍햄과 불링의 성공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도시에서 문화와 상업 그리고 컨벤션의 도시로, 자동차중심의 도시에서 보행로와 공공공간의 도시로, 쇠퇴된 산업도시에서 유럽의 중심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시차원의 비전과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둘째, 상업적 목적의 불링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에 있어서의 도시디자인의 역할이다. City

Centre Strategy(1987) → The Highbury Initiative(1988) → The Pedestrian Movement and Open Space Framework(1988) → The City Centre Design Strategy(1990) Birmingham Plan(1993) → The City Centre Strategy(1992) → The Bull Ring/Markets Quarter Framework(1998)로 이어지는 도시 설계와 계획문서는 불링을 포함한 버밍햄 시의 도심재생사업에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경제적·사회적 요소 못 얹게 도시의 물리적 공간 구조에 영향을 주는 도시디자인 영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양질의 공공공간과 보행로 조성을 통한 사회·문화 환경과 상업환경의 결합이다. 불링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의 초기부터 역사적 불링 지역의 문맥을 고려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과 사람중심적인 보행로는 상업공간을 넘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모이는 사회·문화공간을 형성하였다.

넷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 확보이다. 불링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지만 상징적인 건축디자인(셀프리지 백화점)과 양질의 공공공간의 조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성공적이다. 셀프리지 백화점의 상징

적인 디자인은 바로 이웃한 역사적인 세인트 마틴 교회, 그리고 넓은 광장과 함께 공존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적 기능을 함께 하는 장소성을 조성하고 있다. 즉, 랜드마크적인 디자인과 양질의 공공공간 디자인을 통해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을 이루었다. 성공적인 장소성의 창출은 불링만이 가지는 공간의 특징을 물리적 환경에 투영하여 불링만이 가지는 '공간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다. 2003년 불링의 개장 시 영국 부수상은 연설을 통해 유럽의 중심도시가 되고 있는 버밍햄의 성공에는 민·관 파트너십의 결과라고 강조한 것처럼, 민·관으로 구성된 'Birmingham Alliance'은 불링뿐만 아니라 다른 버밍햄 시의 도심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관련 정보와 협조 그리고 연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2. 브리스톨 도심재생사업 문화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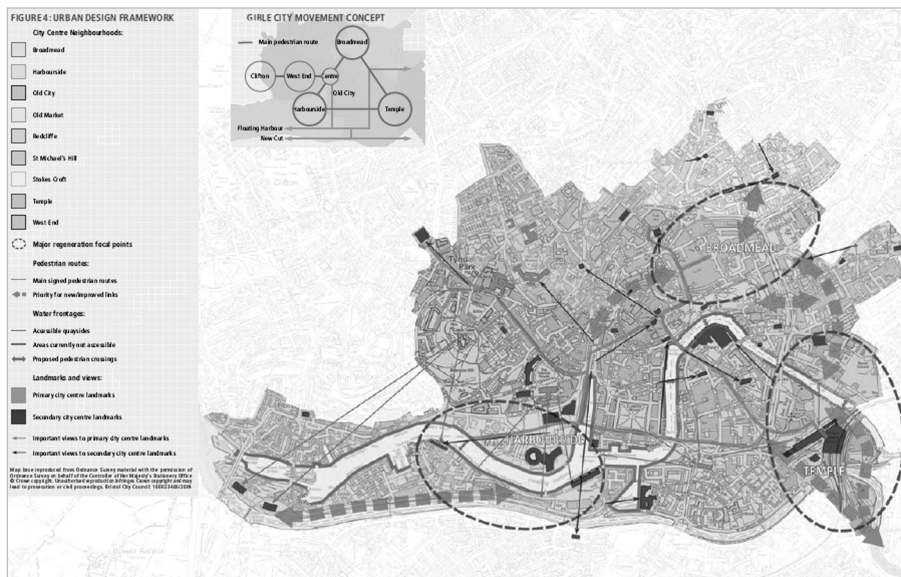
브리스톨 시는 인구 40만명의 잉글랜드의 남서부 위치한 가장 큰 도시이며 영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다. 아본(Avon) 강을 따

라 형성된 브리스톨 항구의 기능이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도심수변과 도심이 침체를 겪었다. 도시의 쇠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1998년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작성하여 침체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도심재개발 전략서는 브리스톨 시를 아래의 9개의 도심근린지구(city centre neighbourhood)의 개발계획과 1998-2005년까지 도심재개발 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2005부터 2020년까지의 9개의 타운도심근린에 대한 도심재개발 방향과 과제를 담은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2'을 작성하여 1998년 이후부터 진행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브리스톨 도심재개발 사업은 크게 ① Harbourside and Old City, ②Broadmead, ③ Temple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Harbourside 와 Old City 지역은 브리스톨 도심재개발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브리스톨시의 Old City 와 Harbourside 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크게 ①복합용도 ②문화시설중심적 ③ 도시디자인 주도의 도시의 정체성 향상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복합용도의 도심재개발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도시디자인적 접근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전략

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시'(Legible City) 주제 안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수변을 따라 형성된 예술센터-공공공간-도심광장-수변로로 이어지는 공간은 브리스톨 시의 문화와 관광공간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

로 '창조적인 브리스톨'(Creative Bristol)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유럽의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하였으며 2008년 'European Capital for Culture'의 영국의 6개 후보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료: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and Action Plan (Bristol City Council, 2005)

〈그림 3〉 브리스톨 시 도심재개발 전략의 중심이 되는 주요 3개의 근린타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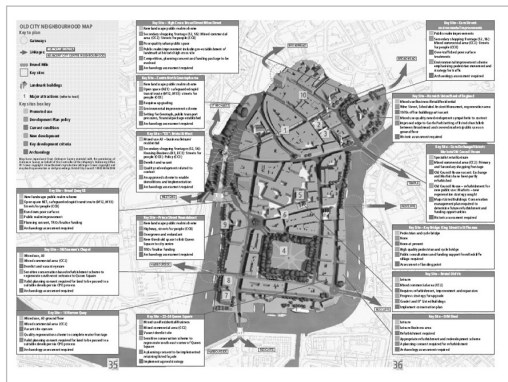
Old City 도심재개발

Old City 지역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도심구조와 건물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공간-도심광장-가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디자인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또

한 양질의 퍼블릭아트는 수변의 문화시설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도시수변광장'과 Old City의 중심에 위치한 'Queen Square' 중심으로 한 도심 재정비와 새로운 문화시설은 기존의 역사적 도심환경의 보존과 이들 시설의 현대적 재

활용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아래의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정비형

'(urban renewal)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림 4).



자료: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and Area Action Plan 2005-2010 (Bristol City Council, 2005), 양도식(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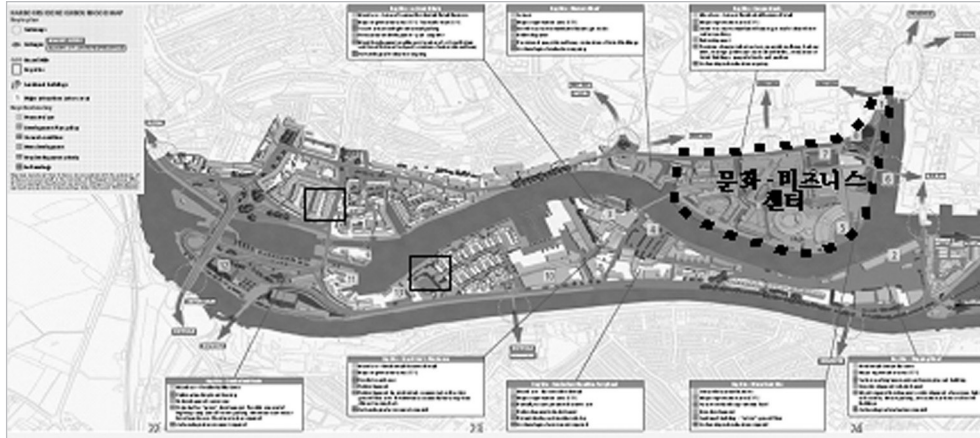
〈그림 4〉 Old City 지역에 진행중인 주요 도심재개발 지역과 성공적인 도심가로와 광장의 예

Harbourside 도심재개발

Harbourside 도심재개발 사업은 1993년 토지소유자인 Bristol City Council, Lattice Properties, British Rail과 여러 개발업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버려진 산업유희지인(brownfield)에 대한 개발계획이 작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컨설팅과정을 거쳐 1998년 'Harbourside Planning Brief'가 작성되었고 이 계획은 브리스톨시의 자치구계획의 부가계획문서로 채택되면서 도심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문화와 레저 그리고 비즈니스 지구'(그림 5-점선 지역)는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이 방문하는 도심의 문화공간이 되었다. 또한 도심지역에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Harbourside 재개발 과정에서 비어 있는 수변과 버려진 산업유희지를 따라 조성하였으며 도심으로 접근하는 공공교통시설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행네트워드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마스트 플랜을 통해 반영하였다.

20년 이상 진행된 브리스톨 도심재개발 사업은 현재에도 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진행 중이다. 9개 지구 중에서 특히 Old City와 Harbourside의 문화·레저·비즈니스 도심재개



자료: Bristol City Centre Strategy and Action Plan 2005-2010 (Bristol City Council, 2005)

〈그림 5〉 Harbourside의 마스트플랜과 주요 재개발 지역

발 사업은 도시수변의 양질의 물리적 공간과 함께 조성되어 브리스톨 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늘어나는 방문객과 양질의 재개발된 도심공간은 이러한 도심재개발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CABE, 2008). 또한 2008년 영국의 문화도시(European Capital for Culture)의 후보도시로 선정된 점도 오랜 기간 브리스톨 시가 시도한 도심재개발의 성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브리스톨 도심재개발의 성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도심재개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자원확보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브리스톨 시 차원의 도심재개발 전략은 2008년 유럽의 문화도시 후보로 선정될 정도로 성장하

였다. 이는 시가 중심이 되어 도심재개발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협력에 기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시의 정치적 리더십과 지속적인 관심은 Bristol City Centre Strategy(1998)로 가시화 되었으며 이 전략서는 자원확보, 토지정리(land assembly),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를 이끄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 전략서는 이해당사자, 투자자, 지역커뮤니티 알려 공동의 관심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도심재개발 전략의 작성과 지자체 자치구 도시계획과의 연계이다. 브리스톨 시는 도심을 9개 지구로 나누어 장기적인 도심재개발 전략과 이를 시의 자치구계획과 연계시켰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그

리고 성공적인 도심재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도심재개발을 위한 'Bristol City Centre Strategy'는 브리스톨 시의 자치구계획의 부가계획문서(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로 채택되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셋째, 문화와 예술관련 비즈니스가 도심재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Old City와 Harbourside 브리스톨 도심재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예술·레저 관련된 사업이 주가 된 도심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다. 도심에 높은 수준의 문화 사업은 창조계층과 창조사업(creative class & creative industry)을 유치하고 이들은 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도심수변을 따라 조성된 문화와 레저 센터는 도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심의 중요한 공공공간이 되었다.

넷째, 도시디자인 전략이 중심이 된 도심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다. 브리스톨 시의 Old City와 Harbourside 재개발은 도심의 침체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행공간-광장-수변로와 함께 양질의 공공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도시계획체계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살만한 도시'(liveable city)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디자인의 역할을 강

조하는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디자인 중심의 도심재개발' 접근은 1998년부터 시작된 'Bristol City Centre Strategy'(1998-2005, 2005-2010)와 최근 'Legible City' 만들기 개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도시디자인 중심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현재 높은 수준의 도심공간과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는데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4 맨체스터 살포드 독 : 산업지역 재생

맨체스터의 살포드 독은 산업혁명 발상지인 맨체스터와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 1894년 건설되었으며 당시 영국에서 3번째로 큰 독이었다. 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는 산업과 경제적 발전을 확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제조업에서 ① 서비스업으로의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 ②항공수송기술의 발달, 화물선의 ③컨테이너화와 ④대형화로 인해 19세기의 산업 항과 독들은 변화하는 이들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쇠퇴를 겪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많은 독과 운하처럼 1982년 살포드 독은 폐쇄되었고 이로 인한 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79년 집권한 대처정부는 민간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살포드 독 지역을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으로 1981년 10년 동안 지정하였으며, 지방정부인 살포드시 티카운슬은 적극적인 재생사업을 시도하기 위해 Ship Canal Company 소유 토지를 구입한 후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85년 작성된 살포드 독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장기적이 차원의 골격인 '살포드 독 개발골격'(Salford Quay Development Framework)은 도시재생사업의 골격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①영국에서 3번째 규모의 버려진 독과 운하를 최대한 활용 ②기존의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③재생사업 지역의 공공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

고 침체된 산업용도의 독 지역의 새로운 경관 조성이었다.

1988년 살포드 시는 1985년의 개발골격의 원칙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살포드 독의 미래 개발전략을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개발 기회를 중점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1988년 '개발전략재검토'(Development Strategy Review 1998)는 앞으로의 살포드 독의 개발전략을 ①적정 수준의 규모와 밀도의 개발 ②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적용된 외관과 재료 그리고 경관 형성 ③개발이 살포드 독 자체의 도시재생은 물론 맨체스터 시의 발전에도 공헌 ④ 특히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기능의 개발을 위한 시설 조성에 중점을 맞추었다. 특히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자료: Salford City Council



〈그림 6〉 기존의 개발골격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전략

‘살포드 독 행위예술센터’(Salford Quays Centre for Performing Arts)를 제안하였고 도심과 개발지역의 연계를 위한 메트로링크(Metrolink)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에는 기존의 개발골격을 재검토 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초기 도시재생사업의 조성된 공공인프라와 초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살포드 독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독의 수변공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수상스포츠, 운하 관련 이벤트를 계획하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공간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공공인프라와 공공공간, 그리고 민간의 건물 디자인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전략이었다.

살포드 독이 본격적인 맨체스터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데 있어 ①공연예술을 위한 살포드센터(Salford Centre for Performing Arts)³⁾ ②로리프로젝트(Lowry Project) ③제국전쟁박물관(The Imperial War Museum)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 성격을 가진 대규모 문화시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배경에는 상징적인 문화시설이 경제발전과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디자인 원칙이 함께 적용되었다.

현재 살포드 지역은 연간 5백 만 명이 방문



자료: Salford City Council

〈그림 7〉 살포드 독에 조성된 제국전쟁박물관의 모습

하고 있으며 현재의 성공을 바탕으로 살포드 도시재생사업은 2005-2015년까지의 사업을 위해 투자가 진행 중이다. 특히 수변의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 ①레저산업 ②기존의 비즈니스 지구의 강화와 조성 ③국제 관광유치 ④살고 싶은 역동성 있는 주거 지구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맨체스터와 살포드 시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살포드 독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 개념을 포함한 마스트플랜을 바탕으로 한 유동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다. 살포드 독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①1985년의 마스트플랜과 ②1988년 재검토된 마스트플

3) 후에 살포드센터 프로젝트는 이후 지역 예술가의 이름을 딴 로리프로젝트로 명명되어 진행되었다.

랜 그리고 ③새천년과 2015년까지의 마스트플랜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년이 넘게 진행된 장기적 도시재생사업에서 명확한 비전을 반영한 마스트플랜은 사업에 있어 결정적이었으며 성공의 견인 역할을 했다. 이 마스트플랜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수정과 보완을 하는 유동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스트플랜의 개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적인 개발 계획의 건축적인 가시화를 나타내는 도면이 아니라 ①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② 공공의 실행계획, ③ 협력할 파트너의 모색, ④ 재생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⑤ 예상되는 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비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⑥ '공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요소도 마스트플랜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의 파트너십 형성은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필수라는 것이다. 살포드 독 사례가 보여주듯이,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민·관의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한 사업의 진행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대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업비용의 충당에 있어 민·관의 협력과 조율은 더욱더 중요하다. 살포드 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생사업

에서는 대부분이 민간자본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재생사업 초기 공공의 신뢰와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구축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문화와 디자인이 주도적인 21세기형 도시재생전략이라는 것이다. 살포드 독은 주거와 상업목적의 도시재생사업전략에서 독이 만든 수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주도형 전략으로 발전했다. 이는 로리 문화시설과 전쟁박물관이 건설, 수변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Cultural Turn) 대변된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약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이룬 상징적 문화시설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 양상이다. 그러므로 물리적·경제적인 측면의 도시재생사업을 넘어 여기에 문화적인 내용을 함께 중요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은 물리적 비물리적인 요소로 가시화 되지만 문화와 디자인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살포드 독의 로리빌딩과 전쟁박물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문화의 정체성이 사람이 시각적 인지를 통해 그 이미지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도시·건축 디자인적 접근은 문화적 정체성과의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와 디자인 주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계적·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과정의 중요성이다. 약 20년이 넘게 진행된 살포드 독의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고 그 상황에 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단기간의 사업이 주는 초기의 비용부담과 어려움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결론과 시사점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의 변천과정과 위의 3가지 사례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의 정책방향 수립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3가지 사례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초기 공공의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 제시이다. 공공의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은 초기의 민간의 투자를 유치를 통해 이룩한 초기성과와 신뢰는 향후 자생적 민간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초기 성과 이후 민간에게 모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도시 재생사업은 민간중심의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때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규모 재생사업을 모방하기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단계적·유동적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이 건축환경의 조성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지속가능성의 여러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실행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다. 즉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물리적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 환경을 환경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작성은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를 다루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내용과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작성 지침서(모델)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인적·재원적 역량이 대도시에 비해 약한 중소도시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사료된다. 특히, 중소도시는 도시재생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


해 정비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등의 수많은 지역발전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작성하고, 공동된 지역에는 패키지화한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문화와 도시디자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본 연구의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21세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요소이다. 이는 3가지 사례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성공요소이다. 또한 우리의 지방중소도시의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문화가 단지 상징적 건물이나 시설의 의미를 넘어 일자리와 경제활동과 잘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8년 영국의 'Cultural Capital of Europe 2008'의 6개 후보도시 중 하나인 브리스톨과 버밍햄은 문화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연계한 전략을 배울 만하다 <표 3 참조>. IMF 경제위기에서 공공근로 및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인력을 확충함에 따라 위기 극복과 함께 정보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급속한 발전을 이룬 사례와 같이 재생사업을 위한 인력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 및 도시디자인 산업의 인력양성은 향후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이후 확산되는 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며,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민·관의 파트너십은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특히 초기의 정부의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도시재생사업과정에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파트너십은 장기적·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재생사업의 성격과 재생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타입의 파트너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여건과 성격에 맞는 파트너십의 모형에 대한 개발과 적용을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파트너십의 질은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질과 많은 연관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에서 파트너십의 초기적인 형태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도시재생인적자원을 투입한다면 그 효과를 일본의 TMO와 같은 효과로 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의 과정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도시재생사업이 줄 혜택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의 3가지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적인 성공의 요소였다. 따

〈표 3〉 영국의 'Cultural Capital of Europe 2008'의 6개 후보도시와 브리스톨과 버밍엄

수변 공간	주요 프로젝트	입찰의 주 내용과 전략	지역에 파급효과
<p>Liverpo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도시수변공간과 The Port of Liverpool, The Royal Liver, The Cunard 역사적 건물 주변의 재개발 • 상징적인 건축물 현대적 문화시설 건축(The Fourth Gr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에 집중전략 • 월드문화 유산지역과 수변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수변공간 건설 •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부흥 • 유명인사를 통한 홍보 (Paul McCart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0 일자리 창출 • £200 백만 파운드 관광 사업효과 • £2십억 민관투자 • 백7십만 방문객의 매년 £5천만 소비 • 도시, 지역 경제발전에 파급효과 (by ERM)
<p>Bristol Harbou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수변과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예술적인 다리의 조성과 재개발이 중심 • 밀레니엄 광장, 브리스톨 체육관 • "At Bristol Millennium"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해양유산, 음악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 9백만명의 방문객, 양질의 도시수변공간과 연계한 문화도시 전략 • "Legible City" 만들기 전략 • 도시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예술활동을 통한 소외된 계층의 참여 유도과 사회융화를 추구하는 전략 • 특히 국제적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오스카 상을 받은 애니메이션의 생산지-Wallace and Gro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00의 소매시장 형성 • £36,000,000의 소매시장 투자 유발 • £190,000,000 소비시장 형성 • 약 5백만 방문객 예상
<p>Cardiff B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500석 Millennium Stadium • Oval Basin(이전 독을 메워 야외공연장으로 사용) • The Depot 프로젝트(전철 창고를 현대예술센터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스포츠와 문화시설이 주 전략(Rugby World Cup, Welsh National Opera, St David's Hall, New Theatre, National Museum of Wales, The Wales Millennium Centre) • 항구의 천혜적 환경의 재개발을 통한 문화수변공간 만들기 전략 • 지난 15년간 재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개의 일자리 창출 • 카디프 도시에는 £660,000,000 경제효과와 웨일즈 전체지역에는 £320,00,000 경제 효과

수변 공간	주요 프로젝트	입찰의 주 내용과 전략	지역에 파급효과
<p>Birmingham Brindleyplace (Can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수변공간을 통한 문화공간창출, 광장과 공원 조성, 보행자전용로 설치, 상징적 재개발 프로젝트 (Bull Ring, Brindley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중심, 산업중심의 도시에서 문화도시이미지와 다문화 커뮤니티 개념 전략 물리적인 건조환경의 재개발과 개발을 통한 전략 운하네트워크지역 재개발 집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700개의 일자리 창출 5백만 명의 방문객 예상 £380,000,000 소비 매년 £100백만 투자유치
<p>Newcastle & Gateshead (the River Ty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을 중심으로 영화관, 갤러리, 박물관, 공연장 마련 Gateshead Quayside - Baltic 예술센터, 밀레니엄 다리, Sage 뮤직센터, Tyne 다리, 힐턴 호텔과 주거지 개발 Newcastle - 세계적 수준의 Gageian Street, 시청, 영화관, Playhouse, 수목원, 공원, Newcastle Quayside 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Tyne 강으로 몇 세기 동안 나누어진 Newcastle 과 Gateshead 커뮤니티를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형성을 통한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략 도시와 주변지역을 함께 활성화시키는 문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00개의 풀타임 직장 창출 향후 5년 동안 £1,200,000,000 경제 효과 2008년까지 약 300,000 명의 방문객 예상
<p>Oxford (Canalsi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사용이 가능한 강과 운하의 관광자원화와 교통시설화(park-and-glide) 런던과 옥스퍼드간이 두 번째 철도 연결 366일 이벤트 프로그램 (2008) 옥스퍼드 박물관 확장, 도서관 단장, 태양열 주택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terway City" 를 입찰의 슬로건 역사적인 도시,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 문화도시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 예술과 과학, 창조성,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과 운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사람 중심적인 공간과 장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0개의 일자리 창출 카디프 도시에는 £660,000,000 경제효과와 웨일즈 전체지역에는 £320,00,000 경제 효과

참고 : 표 안의 내용은 필자가 정리하였음. 그림의 출처는 Johnston (2003)

라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기준과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대상,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 기법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주체간의 공통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추진성과에 대해 지역의 여건에 적합해야 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잣대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앞으로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이 좀 더 다양한 성공의 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성공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러 이해당사자의 현안을 조율하는 기능에 국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중소도시 성공적 사례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재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초기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역량강화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자체는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가져올 수 있는 상생방안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소성과 정체성을 창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 건축물을 통한 공간브랜딩의 전략은 본 사례연구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공요소이다. 21세기의 도시재생전략은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환경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략이 앞으로 우리의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방편이 될 것이다. 상징적 랜드마크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형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라기보다는 지역특성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환경이 강점인 도시에서의 진출입 도로의 경관으로, 지역자원의 상징물로도, 지역의 축제나 문화제, 도시의 슬로건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재된 자원을 서로 연결하는 보행공간, 또는 장소와 그 속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 그리고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장소마케팅이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브랜딩이고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인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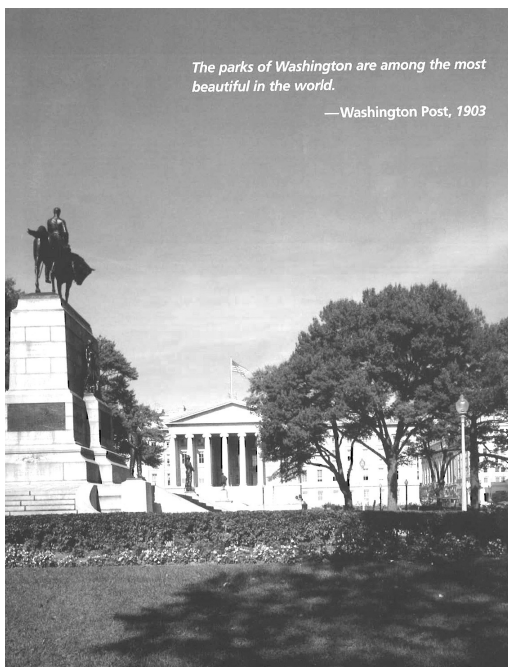
1. 양도식(2008), 영국 도시재생의 유형별 성공사례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양도식(2006),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창조하는 도시디자인", 「국토」, 통권298권, pp.82~101.

활기찬 중심시가지 창조를 위하여

(Creating a Vibrant City Center)

박철희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장

Prologue



The parks of Washington are among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Washington Post, 1903

도시화의 급속한 진척과 신도시의 개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도시 중심부와 시가지는 공동화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수법이 도입되었지만 도시의 활성화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정도의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 정책이 도입·모색되고 있다. 본 글은 도시재생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개한 Cy Paumier¹⁾의 Creating a Vibrant City

1) Cy Paumier는 Ohio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 Harvard GSD 석사에 도시디자이너와 워싱턴 D.C. BID 컨설턴트로 활동 중에 있다.

Center를 번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시·군 지역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신게 되었다.

연재 순서는 총4회에 걸쳐 역사적 관점, 재생 원칙, 시장구성요소, 장소의 중요성, 장소의 원칙, 공공공간, 보행자 체계, 교통순환, 대중교통, 공원, 개발가이드라인, 계획가이드라인, 비전 도출과정, 개발계획, 계획수단의 순으로 할 예정이다.

CHAPTER 1

역사적 관점 *Historical Perspective*

18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도시 중심부는 지역 경제 및 사회생활의 중심지로서, 그곳으로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거래를 위하여 모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 도시 중심부는 시와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커뮤니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사회 경제적인 힘이 도시중심의 물리적인 형태 및 기능을 변화시켰을지라도, 과거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들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중심의 재생에 대한 새로



워싱턴 DC의 큰 애비뉴인 펜실바니아 애비뉴는 권력의 양자리 - (국회나 수도, 지금은 백악관으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의 집)를 연결하는 의식용 넓은 가로수길로서 Pierre L'Enfant에 의해 1791년에 계획되어졌다. 1927년까지 펜실바니아 애비뉴는 패셔너블한 호텔, 극장, 정부, 그리고 소매점과 함께 워싱턴의 '주거리'가 되어 있었다.

은 물결은 오랫동안 정형화된 도시생활을 환경을 재-창조하는 시도이다. 이 장에서는 도시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징에 대한 명확한 정의

(Defining Characteristics)

중심 도시들의 확실한 특징들은 그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업무, 쇼핑, 그리고 생활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있는 특징들은 접근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집중과 강도, 그리고 조직의 구성이다.

접근성(Accessibility)

전통적인 도시 중심은 지역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다. 도시 중심으로서 오래 동안 넓은 도로, 물, 그리고 철도 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투자와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업무 집중화를 이루며, 도시중심부는 생산과 업무활동에 경쟁력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보행과 말의 힘이 교통의 최우선 수단으로 서비스될 때, 대부분 도시 중심 기능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다. 주거와 직장이 상대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함에 따라, 전통적인 중심은 모든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근린지구와 함께 거주와 업무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용도의 다양성(Diversity of Uses)

근접성의 이러한 요구가 사람과 활동들에 있어 풍부하고 매우 다양한 복합결과를 가져온다. 도시중심부에는 주거와 업무가 근접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상점이 군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법원, 학교,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도시 중심의 이렇게 풍부한 복합화는 특화된 기능을 증가시키며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력을 창조한다. 복합화가 풍부하고 다양하면, 어느 한 요소의 상실 또는 쇠퇴로 인해 전체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은 산업적인 부문에 너무 의존적이며, 적정한 업무의 다양성이 빠져 나가게 됨으로서, 도시 중심부들이 쇠퇴하게 한다.

업무, 쇼핑, 주거 그리고 위락 목적 등의 겹치는 분야들이 사람들을 하루 동안 다른 시간대에 다른 목적으로 같은 거리에 모이게 한다.



워싱턴의 주 소매점 회랑인 F Street는 더 나은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영화관을 위한 중추로서 번영되었다. 풍부한 복합도심 용도들은 보행 활동과 특수화된 소매점과 상업적인 기능들의 발달을 위한 시장의 높은 수준을 생성했다.

보행자로 인한 지속적 순환과 볼륨은 상호 지원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잠재적인 이용자와 소비자의 주요 크기를 결정한다. 전통적인 도시 중심의 다용도 특성과 높은 수준의 보행자 활동은 도시 중심에 풍부한 사회적 장을 만든다. 용도가 복합화 된 곳에는 비공식적인 만남의 기회가 있으며 그리고 만남과 사회적 계약의 편의를 증진시킨다. 그러므로 중심지역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을 장려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된다.



역사적인 시장 장소의 삶과 활력은 도시의 거리와 공공장소의 보행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성공한 많은 소매점 자리는 이들 거리들과 사람들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공공장소를 보존하고 강화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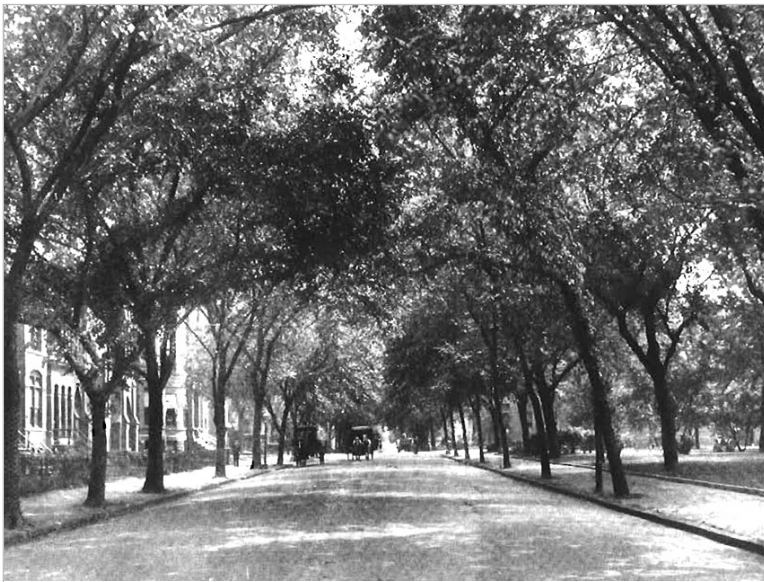


워싱턴에 있는 Square 시장은 야외 활동과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해 계획되어졌다. 여기 중심지에서 발생한 소매점들, 농산물 행상인들, 그리고 경제활동이 도시 도처에 주택지구의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용도의 집중과 강도(Concentration and Intensity Use)

전통적인 중심지역에서 개발의 강도는 토지의 가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극대화한 토지이용은 가로에 건물을 근접하게 하였으며, 강한 공간적인 위요감을 만들었다. 도시중심부 개발이 밀도가 높을 지라도, 건축 관례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며 휴먼 스케일은 보존하였다. 건물의 높이와 매스의 일관성은 가로에 보행자 스케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의 건축적인 조화와 시각적인 통일성을 강화하였다.



도시설계자 Alexander Shepherd에 의해 디자인 되고 개발되었던 주거 거리와 근린공원들은 고품질의 거리 네트워크와 공공영역과 함께 워싱턴의 초기 주거를 제공하였다.



F street 소매지구는 1940년대 까지 워싱턴 지역에서 우세한 상업지역이었다. 도시 도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중심에 있는 상점들, 극장들, 레스토랑들에 도착하기 위해 훌륭한 트롤리(무궤도 전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구조의 조직(Organizing Structure)

토지를 조사, 세분화, 판매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 가로 시스템은 도시들의 건축 및 전체 개발에 있어 잘 정의되고, 조직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공간적인 구조를 만든다. 가로는 소비자에게 시장의 주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로 면의 경쟁력은 중요하다. 개발 필지들은 보통 폭보다 깊이가 더 깊은데, 이것은 각각의 블록에 다양성과 분절 그리고 거리에 연속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좁은 건물의 전면 패턴의 형성에 기인한다. 접지 레벨(접지층)은 상업용도에 가장 적합하며, 상층부는 주거 그리고 다른 비상업용 기능들로 종종 이용된다.

소수의 몇몇 도시들만이 도시 중심의 핵심



1950년대 중반까지 워싱턴시 중심에 도달하는 것은 자동차, 트럭, 버스 교통을 위해 추가적인 거리의 도로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트롤리 네트워크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었다. 또한 뒷골목 주차 이용의 부족 때문에 주차 문제들이 나타났다.



백악관정원과 Lafayette 공원은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장소이다. Lafayette 공원으로 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넓은 가로수 길은 이런 역사적 회랑의 재투자와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의 뼈대를 제공해 왔다.

지역에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며, 도시 광장을 위한 블록 또는 야외시장을 가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 가로 획지의 변형은 만들어 질 수 없는 공간과, 그림으

로써 계획되지 않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오픈 스페이스의 희소성이 그것에 특별한 가치를 주었으며, 도시건축의 대비되고 반대되는 것으로서 영향을 증가시켰다.

워싱턴에 있는 Lafayette 공원과 다른 중요한 공공장소들은 도시 중심 바깥에 위치한 소매와 주거 이용을 재배치를 했을 때 공적과 사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졌다. 새로운 사무실과 서비스 상업 활동들은 도시 경제 재생의 불꽃으로 역사적인 녹지대 주변에서 각각 발달되어 왔다.





워싱턴의 큰 거리와 넓은 가로수길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단일화된 뼈대와 보행 활동과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고품질 환경을 제공한다. K street(왼쪽)과 펜실바니아 애비뉴(아래)는 이들 중요한 시민 공간들의 훌륭한 공공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디자인되었고 다시 지어졌다.

도시 중심부 시장 구성의 변화

(Changes in the City Center's Market Composition)

20세기에서, 교통수단, 토지이용, 경제, 그리고 인구통계에서의 변화는 도시 중심에 놀랄만한 영향들을 미쳤다.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들이 이들 변화의 원인일지라도, 왜 도시 중심이 활력을 잃고 쇠퇴하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9세기 말엽, 말에 의한 운송수단과 가로전차의 출현은 일, 주거, 그리고 여가를 위한 장소들을 분리하고 다양화한다. 1950년에 이르러, 자동차는 도시 주거와 업무에 이동성을 더욱 증진시킨다. 트럭 운송수단은 많은 업무들을 강들이나 철도들 근처에 위치되어야 하는 필요를 없애며, 더 저렴하며 편리하게 되었다. 인구와 경제가 팽창하면서, 중심부지역으로부터 밖으로의 이동은 가속화되었다.

도시중심 쇠퇴의 초기 징조는 많은 주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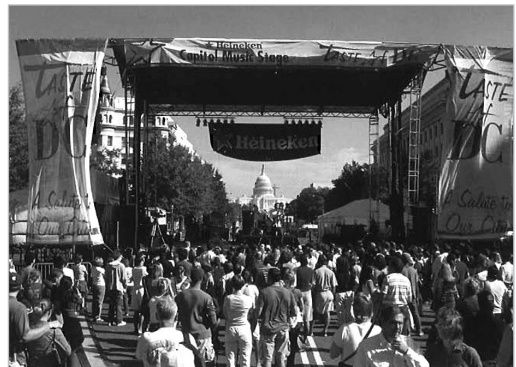


이 상실이었다. 도시중심이 확장되면서, 수익성 있는 업무 용도들이 근린지구로 침투하였고, 삶의 환경의 질을 감소시켰다. 이들 주거 지역에서 주거군들이 노후화되고 그들의 매력이 쇠퇴하면서, 그것을 허용했던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이동하여 교외에서 출퇴근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들은 도시중심지 토지 가치의 상승과 작은 규모의 주거 근린지구들을 유지하게 어렵게 하는 고층 건축물을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상실은 낮과 밤의 활동이 순환을 이루는 다양한 시장에서, 낮 시간의 활동에 의존하는 더욱 전문화되고 제한된 용도 업무 지구로 도시 중심의 변형을 가져왔다.

도시 중심부 물리적 특성의 변화 (Changes in the City Center's Physical Character)

상업과 주거 용도의 상실과 함께 많은 고용자들이 상실된, 많은 도시들에는 병원과 같은 전문시설, 법원, 법률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적인 오피스, 그리고 정부, 문화, 그리고 교육적인 시설만 남게 되었다. 도시의 생명 주기는 단지 낮시간의 용도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발전함으로써 쇠퇴하였다.

고수익 임대자들만 중심도시에 남음으로써 가로에 면한 빈 점포는 더욱 늘었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건물유지에 투자를 할 능력이 없는 한계 업무기능들만 남음으로써, 도시 중심의 경제적 기반의 쇠퇴와 투자부재의 사이클이 초래되었다.

들을 위한 수요와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과 활동들은 현대 상업에서 요구되는 업무 이익, 소비자, 그리고 모든 역동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다. 도시 중심지들은 그것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그것들의 힘을 이용하여, 삶에 풍부하며 즐거움을 제공한다.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가치와 태도의 변화

(Changing Values and Attitudes)

지난 50년간 많은 도시들이 쇠퇴를 경험하였지만, 잘 계획된 도시들에는 오늘날에는 많은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가치의 변화와 도시중심의 개선된 경영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생활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평가 때문이다. 도시 중심부는 중심부가 제공하는 활동의 양과 다양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쟁력 있는 점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오피스, 본점, 그리고 물류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입지하는 것에 더하여, 도시 중심부는 문화적인 시설, 스포츠 행사장, 만남의 장소, 그리고 숙박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

I. 개요

1. 조사개요

1) 목적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은 역량 있는 디자인 실무자들에게 디자인 선진국에서의 워크숍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안목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디자인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08. 8. 30(토) ~ 2008. 9. 7(일) 9일간
- 교육장소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
- 강 사 진 : Luise Adrian 등 12명
- 연수참여자 : 이충훈(충남발전연구원) 외 대구, 광주, 부산디자인센터
전국대학교 디자인혁신센터 연구원 등 관계자 16명
- 교육내용 : 공공디자인의 대표적 사례 도시로서 UNESCO에서 '디자인 도시'로 지정된 베를린시의 국제디자인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정책과 관련된 베를린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그림 1〉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 전경



〈그림 2〉 워크숍 참가자(좌) 및 워크숍 진행과정(우)

3) 교육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강 사
8. 30(토)	출국 (인천) - 도착 (독일 베를린)	
8. 31(일)	공공디자인 현장 방문(구 독일 철도역사) 등	
9. 1(월)	정부의 도시 개발과 전략 - 정부의 도시개발과 전략 : 워크숍 및 강의 - 슈타트포럼 베를린 방문 - 마우어 가이드 : 워크숍 및 강의 - 장벽기념관, 찰리 검문소 장벽박물관 방문 - 장벽 기념관 컨셉 : 워크숍 및 강의 - 마우어가이드 社 방문	Luise Adrian Florian Adler Rainer Klemke
9. 2(화)	공공 공간을 위한 디자인 - 공공 공간과 도시 마케팅의 창의적 가능성 - 가로 시설물 : 워크숍 및 강의 - 공공성과 컨셉, 프로젝트로 가는 공공디자인 - 발 社 방문	Christoph Fleckenstein Albrecht Ecke

일 정	내 용	강 사
9. 3(수)	정부와 도시의 마케팅 전략 - b-베를린 캠페인 : 워크숍 및 강의 - 도시 마케팅 - 베를린 비즈니스센터 방문	Jochen Placking Robert Kaltenbrunner Ronald Koch
9. 4(목)	도시 상징문양과 공공 디자인 - 공공 시설을 위한 디자인 : 워크숍 - 도시 상징문양과 공공 브랜드 - 포츠담 광장 방문 - 베를린 공공 교통의 개발지원 - 독일철도(도이체반)의 기업디자인(CI)	Ryan Abdullah Karsten Henze Karsten Henze
9. 5(금)	컨셉과 사례연구 - 전략적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사례연구 등 - 'Berlin im Licht' (빛속의 베를린) 가로조명 전시장 방문	Ursula Paravicini Klaus Klemp
9. 6(토)~ 9. 7(일)	출발 (독일 베를린) - 도착 (인천)	

2. 조사내용

1) 방문도시 - 베를린

2) 방문기관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

3)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 역할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는 1969년 우수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베를린 업계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40년 동안 500건 이상의 행사, 전시, 국제회의, 워크숍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함
- 디자인 경영, 품질관리, 디자인 관련 컨설팅 등 국내외 유명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4) 주요기능

- 디자인 페어 개최 - 세대 간 디자인 프로그램 교류 추진

- 제품생산 이후 과정에 대한 연구 - 지속성있는 상품디자인 개발 소재에 대한 연구
- 디자인 비평연구, 조사 -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디자인 용어 도출
- 도시에 여러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디자인 역할 모색
- 디자인 상품에 대한 재산권, 생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방안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1. 베를린 일반현황

- 베를린은 15C 브란덴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으며, 이후 18C초 프로이센 왕국, 19C 후반 비스마르크의 제2독일제국의 수도였음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허가 된 베를린은 프랑스의 꼬르뷔지 등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져 현대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
- 베를린 인구는 전쟁이전 600만 명에서 전후 350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나, 통일 후 20년 이내 새로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를 구성하게 됨
- 20세기 독일의 중추도시로서 학문 예술의 전성기를 맞아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

2. 베를린 공공디자인 추진정책

- 독일 공공디자인 정책은 계도와 단속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 전체적 관점의 통합성, 조화성,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적절하게 표출함
- 독일정부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DIN(독일공업표준규격)에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놀이터 공간의 시설과 소재에 관한 규정, 교통시설과 보행공간에 관한 규정, 유치원시설과 사용소재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등

3. 베를린 공공디자인 현황

1) 공공시설물 디자인

○ 버스쉼터

-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스텐과 유리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관과 가로시설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룸
-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기본이념인 기능위주의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대량생산을 고려한 디자인 추구

○ 휴지통

- 일반거리의 쓰레기통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
- 쓰레기통이 바닥면에 있지 않고 벽체나 가로등, 안내표지판 기둥에 부착되어 쓰레기가 고이는 것을 방지함
- 쓰레기통에 화재방지를 위한 담배꽂초를 버리는 투입구를 별도 설치

○ 화장실

- 시내 중심지역의 광장에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지하 화장실 설치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내부는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 유료화장실로 내부 관리자 상주, 공공디자인 견학코스로 활용





〈그림 3〉 공공시설물 디자인 (버스쉘터, 휴지통, 대중화장실 등)

2) 공공 공간 디자인

○ 공원

- 사용자 위주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여 비움의 디자인 추구

○ 도로

- 차도를 따라 중앙에 녹지공간을 두고 벤치와 화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으로 활용
- 차도와 인도의 높이를 낮추고 차도에 자전거 통행로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계획됨

○ 건물색채

- 시내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Gr(회색의), DI(칙칙한), Dk(어두운) 톤으로 구성되어 중후하고 오래된 느낌을 줌
- 반면 집합주택의 경우 L(밝은), Y(아이보리)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온화하고 내추럴한 이미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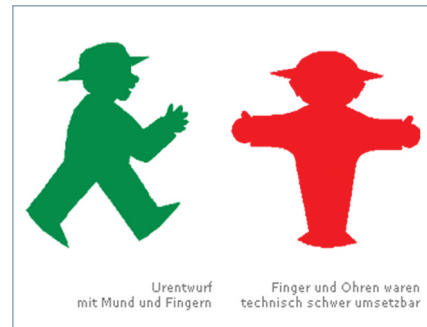
3) 공공 정보 디자인

○ 광고판

- 옥외광고 전문업체가 광고판 디자인 및 제작하여 베를린 시내에 설치
- 원형 및 양면광고판 형태로 기업에 광고비를 받아 관리 운영

○ 신호등

- 1994년 독일정부가 게어(Geher:걷고 있는 녹색신호등 맨)와 슈테어(Steher:서 있는 빨간 신호등 맨)로 구성된 구 동독 지역의 "신호등 맨"을 서독이 사용하는 신호등으로 교체를 검토하였으나,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구 동독의 신호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마르쿠스 헤크하우젠에 의해 구 동독 신호등 맨의 독창적 가치를 문화적 브랜드로 부활시켜 신호등 맨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일본에 진출하여 판매장 개설



〈그림 4〉 베를린 신호등 맨

3. 베를린 공공디자인 현황

○ 추진 개요

- 베를린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ty of Chance' 슬로건을 목표로 베를린시에서 추진기구인 "Service in the City"를 설립하고 '기업을 위한 도시'라는 시장모델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으로 'Alexander platz' 프로젝트를 추진함

○ 추진목적

- 관광객 증가 및 경제수익 기대
 - 베를린 방문객은 2007년 1,730만 명으로 관광수익 8,411만 유로, 고용유발효과 255,000명

○ 프로젝트 내용

- 베를린의 쾌적한 문화 환경 조성, 친절한 서비스 제공

- 관광객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독어 등 다양한 언어제공 계획
- 우울한 도시이미지를 친절한 도시이미지로 개선 - 도시마케팅 추진, 서비스 개선
- 베를린 시민과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 - 정보공유

4. 쾌적한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Service in the City'의 3가지 추진전략

1) Project 1 - 쾌적한 환경조성

- 베를린 TV방송국 지역 - 방송국 조성 전에 쓰레기 하치 장소에 TV방송 수신타워를 건립하고 새로운 플라츠로 조성
- 'Alexander' 지역은 베를린의 관문으로서 가로환경 문제점 파악 개선



〈그림 5〉 알렉산더 플라츠

- 휴지통 : 디자인 분산, 관리상태 불결 -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개선
- 가로등 : 도로변 설치된 조명 파손, 범죄유발 - TV수신타워 주변에 새로운 가로등 설치, 쓰레기 투척 및 범죄예방 효과
- 녹지공간 조성 : 시민 및 방문객에게 쉼터 및 휴식공간기능 부여

2) Project 2 - 친절한 서비스 제공 (도시마케팅 활동 전개)

○ 도시마케팅 추진 목적

- 세계적 경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
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도시마케팅 현황분석

- 1차 마케팅 타겟층은 베를린 시민에서, 주변지역 주민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 더 나아가
외국방문객까지 확대
- 베를린의 경쟁도시 분석
 - 뉴욕 - "I love new york", 침체된 뉴욕경제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제공, 세계적 파워브랜
드 50에 선정, 관광 진흥, 시민통합 기여
 - 홍콩 - "Asia's World City" Hong Kong,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도시 지향, 첨단국제비
즈니스 도시로 전환
 - 싱가포르 - "Uniquely Singapore", 외국자본과 관광지로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다"는 도
시 이미지 확산

○ 베를린시의 SWOT 분석

강점 : 개혁 능력

약점 : Identity 부족

기회 : 국제적 도시로 발전가능성

위험 : 이미지 손상, 전쟁, 낙후성

○ 베를린의 문제해결 방안

- 베를린의 성향
 - 항쟁, 용감함, 문화, 개성, 직설적, 아인슈타인, 흄 볼트 대학(학문), 문화예술 등을 꼽을 수



〈그림 6〉 베를린의 성향

있으며, 베를린은 사업가의 활동보장과 유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동이 있는 도시로서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모색하는 도시임

· 베를린의 특성

베를린의 성향들이 하나씩 중심개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변화의 이미지

사람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며, 개인의 영향력이 시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과 베를린시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림 7〉 변화의 이미지

· 변화의 전략

- 첫째, 시민들의 변화 – 변화의 주역이며, 기회와 인식을 공유
- 둘째, 베를린시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며
- 셋째, 시의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필요로 하고
- 넷째, 변화는 강력한 도시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됨

○ 추진전략

- GmbH 마케팅전문기관에서 베를린시에 4개 프로젝트 건의
 - 문화, 보건, 학문, 사회개발부문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장조사 및 토론행사, 정보교환과, 시민을 위한 캠페인 개최 계획 수립 등
- 캠페인 전략으로는 공모를 통한 브랜드 슬로건 "Be Berlin"을 확정하고, 캠페인 포스터 제작과 슬로건 로고는 시와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함
-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활용한 브랜드 슬로건 홍보캠페인을 전개



〈그림 8〉 베를린 도시브랜드 슬로건



〈그림 9〉 브랜드 슬로건 캠페인 광고

- 베를린 공공기관 종사자(경찰, 청소원, 지하철운행자, 공항근무자, 철도청근무자 등)들을 베를린을 돕는 사람으로 지정 - 공공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하고, 베를린의 첫 인상을 주기 때문
- 유니폼, 패치 착용, 안내서비스 역할 - 베를린의 지식, 정보 공유
- 자원봉사자 : 모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역할 수행토록 함
(베를린 영화제, 베를린 마라톤 등 국제행사에 베를린 정보 제공)
-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활동 전개 - "Be Berlin"(베를린다운~)



〈그림 10〉 브랜드 캠페인 슬로건

3) Project 3 - 국제 온라인 아카데미

- 각 기관 지원을 받아 언어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 베를린 상인연합회에서 온라인 아카데미 지원
- 시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온라인 아카데미 파트너로 참여

○ 공공정보 디자인

- 정보를 위한 디자인은 정보내용과 환경을 고려하고, 정보의 주소지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며, 통일된 Information 안내 사인시스템이 필요
- 안내 사인시스템 - 리플렛, 지도 Information, 컬러, 픽토그램, 서체 등



〈그림 11〉 WALL사의 Blue Spot 단말기

○ 정보를 담기위한 원칙

- 처음 방문자가 도착하는 위치점을 상징하는 깃발 또는 배너를 이용하여 표시
- 교차로 위치점 - 픽토그램 설치 (건물벽), 3D지도 설치 (시멘트, 브론즈, 장애인용 점자, 어린이용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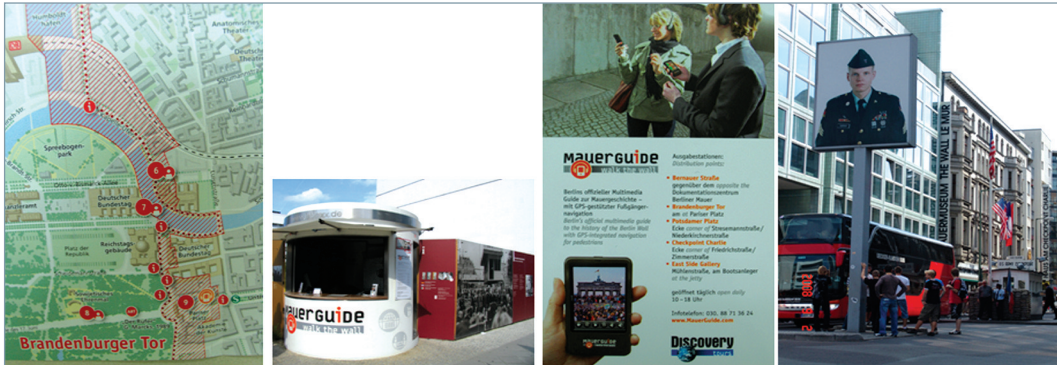
〈그림 12〉 안내지도, 픽토그램, 그리고 입체지도

- 목적을 위한 위치점 - 역사정보제공, 상점, Cafe-콘서트 등 문화예술정보, 상점정보를 위한 배너 설치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어두운 터널, 혹은 장소에 조명을 이용한 안내사인 적용

○ 정보안내지도 시스템 서비스

- 베를린 장벽을 따라서 역사적 장소 및 유적에 대한 지리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우어 가이드를 이용한 지원을 시행

- GPS를 활용하여 지도 및 역사적 사진을 입력하고 찾아가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보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공공사인 역할 담당
- 분단의 상징물인 찰리검문소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으로 변화됨



〈그림 13〉 마우어 가이드 안내지역 및 찰리검문소(우)

○ 도시마케팅 활동 - 박물관, 미술관

- 베를린 시내 슈프레(Spree)강 삼각주지점에 위치한 알 테 갤러리, 알 테스 뮤 지엄, 노이에 뮤지엄, 페라가몬 뮤지엄, 보데 뮤지엄 등이 문화터미널(문화 공간 집 적지)역할을 수행함
- 미술관 및 박물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가로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방문객 증가 대비와 도시 활성화 기대

○ 'City of Chance'를 위한 베를린시의 방안



〈그림 14〉 보데 뮤 지엄, 알 테 갤러리(좌), 페라가몬 뮤 지엄, 알 테스 뮤 지엄(우)

베를린 파트너

· 베를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지닌 공간으로서 변화를 추진함

- 첫째, 시장(market)은 서로의 감정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
- 둘째, 시장(market)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공간
- 셋째, 시장(market)은 경쟁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베를린 파트너"는 통독 이후 베를린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진화를 위하여 시·정·경 모두의 협력을 얻기 위해 신설된 유한회사로서 베를린을 '방문객(외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베를린은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강점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과 도시 마케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

Working together for Berlin.





Berlin Partner GmbH | Ludwig Erhard Haus | Fackeldestrasse 85 | 10623 Berlin | Tel: +49 (0)30 399 80-0 | Fax: +49 (0)30 399 80-239 | Info: +49 (0)30 399 80-239 | info@berlin-partner.de | www.berlin-partner.de | Updated: September 2008

〈그림 15〉 베를린파트너와 연결된 기업

- 사업 이미지 확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시설 및 문화 시설, 업체 등과 같은 베를린 파트너와 회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베를린은 상품으로서, 주변도시는 주변거래 상대로 인식하며, 나아가 독일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16〉 베를린 비즈니스센터 브리핑 광경

5. 공공 공간디자인 개선사례

1)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

-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은 1920년대 버려진 지역에서 잘 정돈된 주거지역으로 변화된 사례로서 1928년~1930년 건축가 브르너에 의해 설계됨
- 건축물의 특징
 - 자연환경과 조화, 공간공원이 거주자의 휴식공간으로 환원되도록 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인 "호프양식"으로 구성됨
 - 1900년대 베를린 도시건축 이슈는 면적으로 작은 면적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
 - 경제적 측면에서 창문에 컬러를 적용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창문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렸으며, "ㄷ"자 형태의 건축물 공간 안에 공원을 공동 사용케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배려



〈그림 17〉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

- 1920년대 건축양식이 장식적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바우하우스의 월터 그로피우스 등 건축가들과 연계하여 건축이 이루어짐
-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사회적 문화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인식

2)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

○ 현황

- 1887년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슐트 하이스' 양조장 설립
- 19세기 중반 맥주제조에 알맞은 지하 암반수 발견
- 1967년 맥주공장 폐쇄, 주변아파트 주거지역과 함께 황폐화
- 1998년 리모델링을 거쳐 2001년 문화양조장으로 재구성되어 연간 2,000건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재생프로그램 내용

- 건물의 외벽을 보존하고 공연장 명칭도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
- 케셀하우스(보일러실), 기계실(MaschinHaus), 마굿간(Futterbodn) 등
- 8개의 영상관으로 구성된 극장, 음악, 연극 퍼포먼스가 열리는 다목적 공연장, 키노갤러리, 장애인전용극장 등 문화공간과 부대시설로 여행사, 슈퍼마켓, 카페 등이 있으며, 전체 4만 평방미터 중 1만3천 평방미터만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됨
-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꿈꾸는 도시로 변화

3) 프리드리히 베아더 위에 있는 2개의 공원

○ 공공공간디자인 - 프리드리히 베아더 공원의 조성방향

-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
- 비움의 디자인, 설치시설물의 최소화
- 주민,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공간디자인 추구



〈그림 18〉 초창기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 맥주공장내부



〈그림 19〉 복합문화공간과 부대시설들이 들어선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 전경

○ 공원의 특징

- 높지대로서 지반을 높이고 터를 다져 공원을 조성한 지역으로 사무실 건물과 주거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키 작은 나무를 공원주변에 심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공원구성소재는 오래된 분수를 새로운 공원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벤치는 폭을 넓혀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이어진 석재 벤치는 쉼터기능, 경계선 기능, 주차장과 공원의 분리 기능을 함
- 놀이터의 컨셉은 차가운 느낌을 벗어나 어린이 취향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기둥형식의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의 직접 참여로 공유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동물무늬 패턴, 빨강, 분홍 등 선호하는 색채를 적용함
- 공원 디자인 개선시 기존의 공터를 많이 변형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만을 강조하였으며,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설계 및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비용은 85만 유로가 소요



〈그림 20〉 프리드리히 베아더 공원

4) 올라프(ULAP) 공원

- 교통수단 전시장으로 사용되었던 올라프 공원에 대한 조성방안을 찾기 위해 2005년 베를린 시에서 공원 설계공모를 실시
- 주변에 베를린 중앙역사가 인접한 자투리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을 고려하여 공원과 계획 수립
- 비행기 등 교통수단 전시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로서 예전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바닥에 자갈, 모래를 시공하여 특성을 살림
- 공원 안쪽으로 나무벤치를 배치하여 이용자를 안쪽으로 유도하고 야간조명 설치
- 이전 나무계단과 새로 설치한 계단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보행은 새로 설치한 계단으로 이용하도록 함



〈그림 21〉 올라프(ULAP) 공원

5) 놀더 플라츠(Nolder platz)

- 지역재생사례로서 시내로 진출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선된 공원으로서 공원주변의 4개 도로가 공간을 분할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에서 10개의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토론의 과정을 거쳐 공원의 개선 컨셉을 '보석과 같은 공간'으로 방향을 정하고 '액자 틀'과 같은 하나의 떠오르는 지역개념을 적용 즉, 책상 서랍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공간개념을 적용함
- 전철역 방향의 공간은 시장이 열리고, 학교로 가는 공간역할을 하며, 공원 놀이터 공간 구성은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학생들과 예술가와 공원놀이터의 공간 이용계획 협의 후 공동작업을 통해 시설물을 설치함
- 베를린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공원 전체면적은 36ha이며, 공사비는 250만 유로가 소요되었다.



〈그림 22〉 학생과 예술가 공동작업 설치물



〈그림 23〉 공원 옆 이민국 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쉼터



〈그림 24〉 놀더 플라츠(Nolder platz)

6. 공공정보디자인 개선사례

1) 독일철도 안내사인 시스템 디자인

○ 개발목적

- 고객과의 소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안내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디자인을 통해 회사이미지 개선함

○ 픽토그램 개발 내용

-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
- 색상 구분으로 내용 전달
- 청색 - 기차역내 시설물 안내 픽토그램
- 노란색 - 서비스 관련 픽토그램
- 시각장애인용 - 점자 픽토그램 설치

○ 기차표 판매구역 개선

- 기차역의 또 다른 이미지 구성

- 이용객의 수, 동선 파악
- 디자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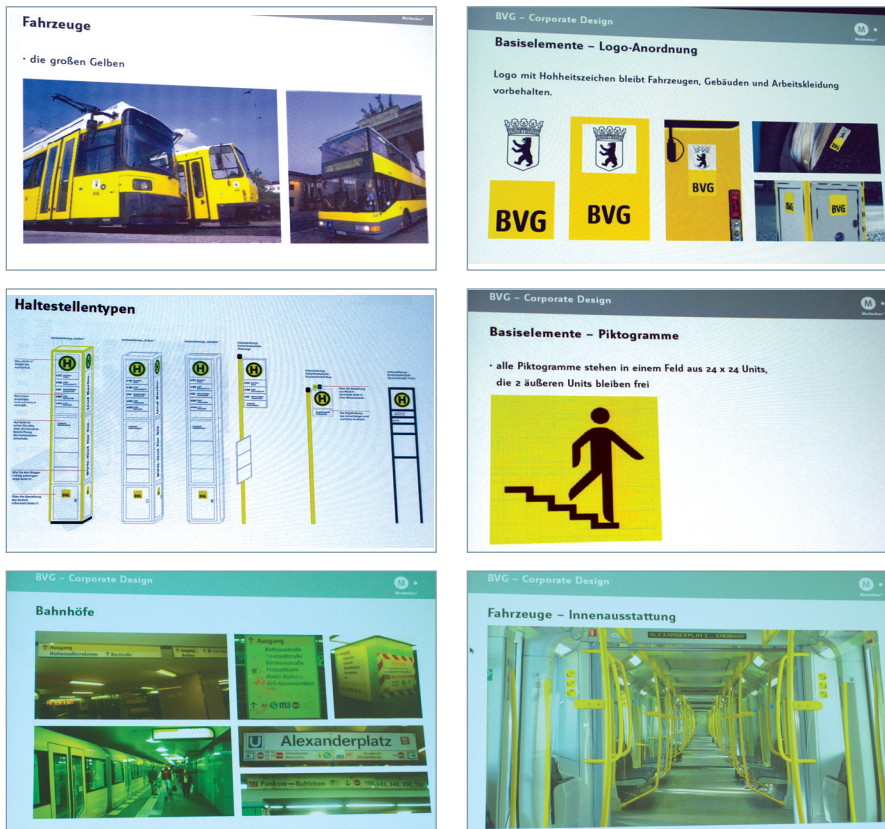
〈그림 25〉 독일철도 정보전달 디자인 및 시설물 디자인

2) 대중교통수단 CI 개선 (BVG)

- BVG는 독일 최대 도시교통수단으로서 버스, 지하철의 색채 및 안내시스템, 픽토그램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이덴티티 정립
- 개선목적
 - Basic Element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로고와, 상단에 베를린 상징인 곰을 적용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 경제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목적으로 함
- 베리어프리 디자인개념 적용
 - 가시성을 고려하여 주색상을 노란색으로 활용하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에 조명을 설치하고, 지하철 객차 내부연결 통로를 넓게 하여 다른 칸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됨
 - 내부 손잡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처리, 시각적 가시성과 일체감 조성
- 개선효과
 - 버스내부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매년 25만 유로 절감효과를 이룸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많은 유럽 도시들이 탈산업도시,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변화 과정에서, 문화를 모티브로 한 공공디자인을 주요한 도시 활성화의 도구로 이용
- 베를린은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을 추진
- 해외도시브랜드 슬로건 마케팅의 성공사례에 비해 국내 도시의 브랜드 마케팅은 시작단계로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객관적 조사,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설정하여 브랜드 슬로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함



〈그림 26〉 BVG 교통시스템 디자인

국방문화와 병영체험의 중심거점 연무소도읍

윤정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입지현황

- 연무읍은 논산시의 남단에 위치하며, 금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시와 완주군에 인접하고 있어 물류유통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적 특성
- 호남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논산 IC와 연무 IC가 위치, 교통 접근성 용이
- 연무읍 북쪽에는 중심시가지, 남쪽에는 육군훈련소가 위치하고 있음



[그림 1] 위치도



[그림 2] 행정구역도

인구

- 연무읍의 2007년 현재 인구는 17,522명이며, 2000년 이후 연평균 2.7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논산시의 경우 2007년 현재 129,486명이고, 최근 7년간 연평균 1.39% 감소

- 성별로는 남자 8,914명, 여자 8,608명으로 성비(남자 100인당 여자인구수)는 96.5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은 편임
- 연령별 인구구조(2007년 기준)는 14세 이하의 소년인구가 2,781명으로 전체 약 15.9%,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11,592명으로 66.2%, 노령인구가 3,149명으로 18.0%의 구성비를 나타냄
- 연령별 인구구조에 부양인구비는 51.2%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지수는 113.2%로 나타남
- 부양인구비는 연평균 1.3%의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노령화지수는 6.2%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00-07기준 증감율)
-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는, 전 연령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와 유아기가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임.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의 연령대와 40대임

[표 1] 논산시와 연무읍의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감율
논산시	142,828	140,793	138,013	135,719	135,572	135,210	132,814	129,486	-1.39
연무읍	21,319	20,831	19,863	19,067	18,853	18,552	18,036	17,522	-2.76

자료 : 논산시, 논산통계연보, 각 년도(주 : 외국인 포함)

산업구조

- 연무지역의 총 가구수는 7,030세대이고, 이중 농가는 1,952가구(27.8%)로 지역내 비농가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음
- 반면 지역산업구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업이 54%이고, 광공업이 13%,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이 33%로 나타나 농가 비중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전체의 산업구조 농업 비중이 높은 편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연무읍 사업체수는 1,074개소이고, 종사자수는 4,148명임. 논산시 사업체수 9,091개소, 34,618명의 11.8%, 12.0%에 해당

충남의 도시16 - 연무소도읍

-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315개소)과 숙박 및 음식점업(232개소),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60개소) 비중이 높음
- 그리고 연무읍은 논산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신업(LQ 1.4)과 숙박 및 음식점업(LQ 1.2)의 집중도가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화정도가 높은 것은 육군훈련소로 인해 방문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지역특화산업

딸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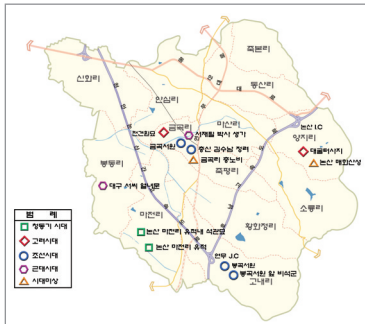
-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면적 21.3%, 생산량 21.3%를 차지하고, 충남 생산면적 44.5%, 생산량 41.4%를 차지하고 있어 논산시 대표 특화작물
- 논산지역에는 약 180여개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읍면단위 영농조합에서 유통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 특히 딸기를 테마로 그린투어리즘 활발
- 그러나 최근 지역 내 딸기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딸기를 주요 작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그러므로 지역의 딸기산업을 구조고도화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위해서는 시설 재배의 확장과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기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축산산업

- 대표적인 지역축산산업으로 축산과 양돈을 들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소 사육호수는 연평균 7.1% 감소한 반면에 돼지의 사육호수는 연평균 40.4%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연무지역에서 돼지 사육이 증가한 것은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한 것에 기인
- 전통적으로 연무읍은 가축사육이 활발하여 논산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연무읍의 경우 낮은 지가와 사료의 원활한 공급 등으로 인해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단순한 가축사육에 한정되어 축산업의 부가가치화와 고품질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

문화 · 관광자원



[그림 3]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역사문화자원

- 연무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으나, 전통역사자원의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유적을 비롯한 향토문화재가 있음
-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견훤묘와 서재필박사의 생가, 금곡서원 등이 있음

육군훈련소

- 육군훈련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2006년 기준으로 부대경비와 세금, 기간 장병 및 훈련병, 방문객으로 발생한 지역내 지출은 약 542억원(논산시 예산액의 약 20%에 해당)
- 논산시에 거주하는 군인은 약 900여명으로, 총소득금액 257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129억원을 생활비, 교육비, 공공요금, 지방세 등으로 지역내에서 지출
- 또한 2,800여명의 기간장병이 외출, 면회시 사용하는 경비도 연간 11억원 추정
- 아울러 육군훈련소 방문객이 지출하는 경비 약 110억원으로 추정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 축제

-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후원으로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충남의 도시16 - 연무소도읍



[그림 4] 병영체험축제

개최. 올해 약 4만5천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

- 그러나 육군훈련소 및 병영체험 등의 국방문화자원이 특화자원으로 착근되지 못함
- 따라서 지역 내 국방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국방문화의 체험관광산업화” 방안 모색

지역관광객 및 관광수입

- 연무읍 단위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수입을 추산하고 있지 않으나, 논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들이 연무읍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논산시 2005년 관광수입은 801,706천원이며,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
-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연무대에 입소하는 신병과 관련한 방문객들이 연간 100백만명에 이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기반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수요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 논산시 관광객 및 관광수입

(단위 : 천명, 천원)

연도	관 광 객			관 광 수 입		
	계	외국인	내국인	계	외국인	내국인
2001년	168	1	167	185,624	69,000	116,624
2002년	629	2	627	556,872	207,000	349,872
2003년	881	3	878	492,831	92,954	399,877
2004년	930	8	922	667,793	247,877	419,916
2005년	1,157	9	1,148	801,706	278,861	522,845

자료: 논산시 통계연보,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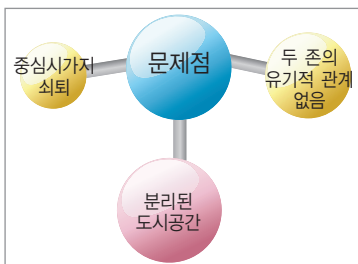
공간체계의 문제점

연무읍의 공간구조는 크게 2개 존으로 분리

- 북측의 중심시가지가 입지된 르네상스존과 남측의 육군훈련소가 입지된 육군훈련소존으로 구성
- 르네상스존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육군병원, 재래시장, 관공서 등이 위치
- 육군훈련소존 주변은 연무대로(국도1호선)를 따라 일부 상가와 취락지역이 형성

르네상스존 중심시가지 쇠퇴

- 르네상스존은 안심2로와 동안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입지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쇠퇴
-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없어 도시가 전반적으로 쇠퇴된 경관을 갖고 있음



[그림 5] 연무소도읍의 공간 문제

육군훈련소존과 중심시가지존 유기적인 관계 미흡

- 육군훈련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연무대로를 통해 훈련소 방문 후 르네상스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출
- 육군훈련소는 주변 가로망에 오픈스페이스와 경관창출 미흡

공간발전구상의 기본방향

르네상스존과 육군훈련소존의 연계 · 통합

- 연무소도읍의 공간구조 개편은 북측의 중심시가지가 입지된 르네상스존과 남측의 육군훈련소 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 중심
- 즉 육군훈련소 방문객을 중심시가지로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개편

충남의 도시16 - 연무소도읍

1차적으로 르네상스존과 육군훈련소존 자체 어메니티와 경쟁력 제고

- 르네상스존은 주차장 정비와 상권의 활성화 프로그램 계획 필요
- 육군훈련소존은 상징공간 정비와 음식점 정비 계획 필요

2차적으로 연무대로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두 존 연계 계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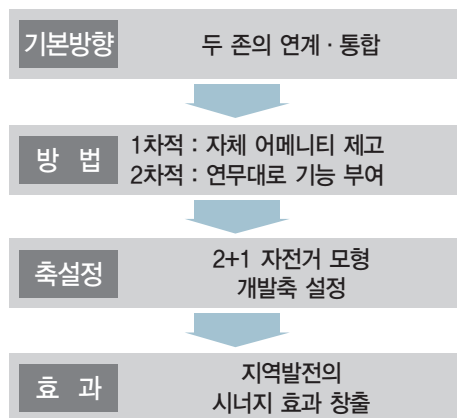
- 육군훈련소존 방문객을 르네상스존으로 유도

「2+1 자전거 모형」연무 개발축 설정

- “연무대로”를 중심으로 병영체험축제 및 국방과학문화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도시공간축을 설정하여 연무를 랜드마크화
- “안심로”를 중심으로 도시기반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프로그램 추진
-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안로”를 중심으로 도시활성화축 설정

지역발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

- 따라서 르네상스존의 앞바퀴와 육군훈련소 뒷바퀴는 연무대로를 통해 상호 연결되고, 이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



[그림 6] 공간체계 기본방향



[그림 7] 연무지방소도읍의 공간개발 구상도

지역자원에 따른 발전방향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국방시설의 재인식으로 자원화 · 산업화 추진

- 연무읍 인근 지역에 3군 본부, 항공학교, 자운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방시설 및 최근 논산시 상월면에 국방대가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국방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 · 테마화하여 자원화 · 산업화해야 할 것임

방문객을 지역내로 유인하여 지역상권 및 고용기회 확대

- 연간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
- 또한 지역내 상권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용기반 취약해지고 있음
- 그러므로 기반 구축을 통해 방문객을 지역내로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별화된 지역상징성 제고와 도시기반의 재정비로 삶의 질 제고

- 연무읍은 다른 소도읍과 달리 육군훈련소라는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군사시설을 활용한 랜드마크가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중심시가지는 노후화로 인해 혼잡과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성(城) 안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재미 쏠쏠' 서산 해미읍성축제

이용원 | 월간 '토마토' 편집실장

몸체는 둥그렇고 한쪽 끝은 뾰족하게 깎아 만든 팽이에 줄을 둘둘 감아 보기 좋게 땅에 내려놓는다. 기대와 달리 힘없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진다. 힘을 내라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좀 돌린 것 같은데, 영 체면이 안 선다.



큰 소리는 쳤겠다. 그냥 둘 수가 없어 제기를 집어 들고 제기차기에 도전해본다. 이도 쉽지가 않다. 제기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다리를 눌러야 하는데 꼭 반 박자씩 늦는다. 마음과 몸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아이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잔뜩 준 많은 아빠들이 그랬다.



우리 명절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해미읍성'에서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렸다. 매년 가을이면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해미읍성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다.

큰 명절이면 이곳에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올해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월 7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펼쳐졌다. 팽이치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연 날리기, 떡메치기, 투호, 널뛰기 등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성 곳곳에 마련되고 짚공예와 대나무공예 등을 시연해 즐거움을 더했다. 설날 찾아간 해미읍성에는 일찌감치 차례를 올리고 나온 사람들이 적잖게 찾아 곳곳을 돌아보며 전통 민속놀이를 즐겼다.

해미읍성 민속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그곳이 해미읍성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최근 복원한 것이기는 하지만 옛 그 시절 정취를 느껴볼만 하다. 기와집뿐만 아니라 민초들이 살던 초가집과 교묘하게 감춰 둔 재래식 화장실, 부엌 등도 복원해 놓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은 해안지역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던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조선 태종17년(1417년)부터 세종3년(1421년) 사이에 축성했다. 당시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30여 년간 병마절도사영이 있었다. 효종3년(1652년)에 병마절도사영을 청주로 옮기면서 이곳에는 관아를 들어 해미읍성으로 이용했다. 또 1914년까지 겸영장이 배치되는 호서좌영으로 내포지방의 군사권을 행사했던 곳이다.



이 읍성에는 동헌을 비롯하여 아사(衙舍) 및 작청(作廳) 등의 건물들이 가득 있었으며,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유적도 일부 남아 있다. 1974년에 동문·서문 복원되었고, 1981년 성내 일부를 발굴한 결과 현재의 동헌 서쪽에서 객사와, 현재의 아문 서쪽 30m 지점에서 옛 아문지가 확인되었다. 성곽둘레는 1,800m, 높이는 5m로 성문은 동, 서, 남 세 곳에만 있고 북에는 암문이 있다. 1578년(선조11년)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간 근무한 적도 있다.

성의 둘레에는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탕자나무를 돌려 심어서 탕자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탕자의 한자음을 따 지(枳)성이라고도 했다.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는 그 자체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복원한 건물들도 제법 아름답다. 하얀 눈이 가득 쌓인 성을 거니는 것은 겨울 산책의 묘미를 선사했다. 그러나 민속축제가 아니더라도 해미읍성은 찾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흰 두루마기 입고 횃불 들고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 조금 다른 의미 간직한 '아우내봉화축제'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1919년 충남 천안시 병천 아우내장터에 3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른 것은 4월 1일이다. 호서지방 최대 독립만세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김구옹, 조인원, 유중무, 이백하, 김교선 등이 주도했다. 일본인을 죽이거나 방화를 하는 일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한 이날 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김구옹과 그 모친 최씨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유관순을 포함한 많은 참가자들이 부상, 투옥됐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옥중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 때문에 모진 고

문을 당해 같은 해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한 채 순국했다.

목숨을 건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아우내봉화축제'는 매년 2월 28일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열리고 있다.

사적지 주변 다양한 볼거리

충남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적지로 들어가는 차량도 통제하는 행사관계자들은 무척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늘에 등실 떠 있는 애드벌룬이나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다른 축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풍기는 느낌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독립열사의 사적지라는 공간적 특징과 죽음으로 항거한 선열의 촛불만세운동을 기리는 의미가 갖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엄숙함만이 있지는 않았다.

햇불을 점화하는 저녁 8시가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축제참가자들이 이미 사적지에 모여 있었다. 일찌감치 사적지를 찾은 사람들은 식전행사로 광장과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켜보기도 하고 광장에 빙 둘러 설치한 부스에서 체험행사를 즐겼다.

만세운동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를 목판에서 탁본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캐릭터 햇불남자는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또 사적지를 찾은 사람은 빼놓지 않고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들러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한 항거와 역사의 장면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관에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뿐만 아니라 기미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자료와 서대문형무소 수형자기록표, 재판기록문까지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료가 가득했다.

사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다양한 기념물이 있어 일찌감치 병천을 찾아도 무료한 시간을 보낼 필요 없다. 유관순 열사 생가지와 봉화대, 추모각, 초혼묘 등은 잠깐 걸거나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사적지 진입로 구실을 하는 '열사의 거리'에는 기념조형물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어 걷기 좋은 공간이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90년 전 전국 방방곡곡과 천안시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났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기에 적당하다. 실제로 가족단위로 사적지를 찾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슴 속엔 뭉클한 감동



사적지에 어둠이 내려앉으며 식전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병천고등학교 전통연희단 '하늘소리' 공연은 단연 백미였다. 풍물과 버나돌리기, 살판, 줄타기까지 저 옛날 아우내 장터에서 펼쳐졌을지 모를 전통 놀이를 눈앞에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창 줄타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광장을 쳐다보니 하얀 두루마기와 머리띠를 똑같이 갖춘 참가자들이 가득하다.

사적지에서 아우내장터까지 횃불을 들고 행진할 참가자들이다. 식전행사가 끝나고 헌화 및 분양, 3·1절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되면서 봉화탑에 불길이 오르고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봉화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진행 부스에서 하얀 두루마기와 머리띠를 받고 사적지 정문에서 나눠주는 횃불을 받을 수 있었다.



대열을 갖춘 행렬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적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셀 수 없이 모여든 언론사 카메라기사와 현장을 담고 싶어 하는 사진 동호인들을 위해 대열은 더디기만 했다.

'열사의 거리'를 빠져나오면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됐다. 약속한 대로 대열 앞에서 외치는 만세 선창에 따라 행진 참가자들이 외치는 함성이 밤하늘에 가득했다. 대열 중간 중간에서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만세 선창이 터져 나왔고 그 때마다 주변에 있는 참가자들은 횃불을 높게 들어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따라 외쳤다. 간간히 파란 눈의 외국인도 눈에 들어왔고 3대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도 보였다.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루는 행렬 길이는 500m가 족히 넘어 보였다. 행렬 속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았다.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였다. 신념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했던 90년 전, 3천 명이 넘는 군중이 외치는 '대한독립만세'는 선조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메아리쳤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군중 앞에 선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오직 손에 든 총칼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금이 저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행렬이 아우내 장터에 도착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일본 헌병과의 충돌이 있었다. 유관순 열사 역할을 맡은 시민의 울부짖음과 헌병대가 쏘아대는 공포탄 소리가 아우내 장터에 가득하다. 소리를 듣고 나온 시민들까지 더해지면서 장터가 북적북적하다. 하얀 두루마기를 함께 입고 대열을 이루고 있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손에 든 횃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한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며 30여 분을 걷는 동안 가슴속에선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고 있었다.

역사의 현장 속으로



90년 전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그 때 그 장터에서 간단한 해산식을 한 후 이날 '아우내봉화제'는 마무리되었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천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터 중간쯤 이르렀을 때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불꽃이 이날의 축제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렸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한 곳을 본다. 하늘을 수놓고 있는 아름다운 폭죽만큼이나 아우내 장터를 채

우고 있는 사람들도 아름다웠다.

자치단체의 축제는 대부분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축제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천안시의 '아우내봉화축제'는 조금 달랐다.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들뜬 열기를 발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묘한 '긴장'과 '감동'이 배어 있다.

새봄을 맞이하기 전 아픔과 감동이 함께 한 우리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햇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미리 기 본 충남 봄축제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올해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주제는 '꽃, 바다 그리고 꿈'이다.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02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규모 꽃 잔치다.

다양한 학술·경연행사를 비롯해 꽃사랑 퀴즈대회, 플라워바디페인팅, 꽃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유명한 초청 토크쇼, 스트리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상설 이벤트가 펼쳐진다.

국내외 113개 지자체 및 업체에서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유류유출사고의 후유증이 박람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바다풍광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 잔치를 보고 싶다면 안면도로 달려가자.



기간 : 4. 24(금)~5. 20(수), 27일간

장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꽃지·수목원 일원

주최 : 충청남도·충청남도 개발공사

주관 :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

문의 : 041) 670-6000

<http://www.floritopia.or.kr/>

4월 동학사와 마곡사를 주목하라

봄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계룡산 줄기 따라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벚꽃 예쁘게 피는 동학사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산신제와 교구본사인 마곡사 신록축제까지 다양하다.

갑사와 신원사, 계룡산도예촌을 비롯해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계룡산 줄기에서 아름다운 봄꽃 향에 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계룡산봄꽃축제 : 4월 8일~15일 (계룡산 동학사 일원)

계룡산 산신제 : 4월 10일~12일 (계룡면 양화리)

마곡사 신록축제 : 4월 19일 (마곡사)

문 의 : 공주시 문화관광과(041-840-2841)

통통하게 살찐 우럭 만나자!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만에서 잡히는 우럭은 육질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우럭이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매년 6월 초에 축제를 열고 있다. 삼길포구에서 개최하는 우럭축제는 관광객 즉석노래자랑과 봉장어 잡기대회, 갯벌체험, 유람선관광, 바다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기 간 : 5월 말~6월 초

장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주 관 : 삼길포 우럭축제 추진위원회

문 의 : 서산시 문화관광과 (041)660-2224,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samgilpo.com>

칠갑산으로 장승 깎으러 가세~

칠갑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승 보존지역으로 유명하다. 4월 청양군에 가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장승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단 하루 뿐인 장승문화축제에서는 칠갑산 전통장승 깎기 및 장승제 시연이 펼쳐지고 대형장승 및 솟대 세우기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외에 창작 장승과 시대별, 지역별 장승을 전시해 우리나라 장승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대행사로 칠갑산 산나물 채취 체험과 전통 구기주 만들기 체험, 장승 목걸이 만들기, 민속공연, 마당극 공연 등이 펼쳐져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 기 : 4월 18일(토)

장 소 : 청양군 장승공원 (칠갑산 장곡사 입구)

문 의 : 청양군 기획감사실 041) 940-2224~5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 영 원 | 농협충남지역본부장



원유유출 사고 후, 1년만에 만리포 해수욕장을 다시 찾았다. 푸르른 바닷빛과 밀려드는 파도는 하얀 포말을 끊임없이 내뿜으며, 다시금 되찾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뿜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검은 바다 뒤로 엄습해 왔던 절망과 두려움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천지였다. 끝없이 밀려드는 기름파도와 싸웠던 전국의 120만 도우미의 손길 하나 하나가 푸른 태안을 되찾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우리는 이를 '기적의 손'이라 부르길 서슴치 않았다.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고 온 국민의 화합과 불굴의 의지를 꽃 피우게 한 이곳, 태안에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바로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다.

이번 축제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아름다움을 되찾은 청정태안의 바다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1억 송이 화려한 꽃무리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원유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과 농수산물 소비 감소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

해안 지역경제 회복과 이미지 쇄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삶의 질이 확산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농가의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방제작업에 동참했던 120만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도움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태안의 기적 만들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재탄생한 청정 태안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봉사를 통한 참 행복의 의미를 회고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계기도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이처럼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적 축제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번 박람회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느끼면서 행사 준비 및 관람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 향우회·학교·사회·종교단체·기업체 등에 꽃 박람회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농협도 지난 200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꽃박람회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전국 농협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박람회 참여를 권장하고 입장권 예매에도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농촌과 함께하는 꽃 축제 한마당"이라는 주제의 『농협관』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는 농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업·농촌과 화훼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의 장도 마련된다. 박람회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충남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는 등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따뜻한 봄이 본격 시작되는 4월!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최고의 향기로 온 국민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꽃단장을 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도시민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농업인에게는 생명창고를 지키는 보람을,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청소년에게는 살아 있는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120만 자원봉사자의 땀방울이 기적의 1억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번 박람회가 충청남도의 발전은 물론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제위기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재도약하게 만드는 '국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공주 · 부여지역의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서 만 철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자는 지역 여론이 수년전부터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신라 유적과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백제의 유적도 등재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구색 맞추기 식의 발상이 아닌 진정 1,500년 전 동북아시아의 문화중심으로서의 백제문화가 진정으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UNESCO 산하의 세계유산위원회 주관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재되며, 그 종류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물군, 유적지 등을 뜻하는 것이고, 자연유산은 지구의 진화단계를 나타내거나 초자연적인 자연현상, 지질학 생물학적인 진화나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현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 식물의 서식지 등을 뜻한다. 또한 복합유산이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유산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종묘,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을 등재시키고 이어 1997년에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을, 2007년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자연유산에 등재시킴으로서 문화유산 7건과 자연유산 1건을 등재시킨 바 있다.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유산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공주-부여에는 백제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공주와 부여가 각각 백제의 도읍지였었기 때문에 당시의 백제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1〉 공주의 공산성과 고마나루

공주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정지산유적, 수춘리고분군과 부여의 부소산성, 청마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등이 그것이다. 크게 보면 성곽(공산성 부소산성 청마산성), 고분(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사찰(정림사지, 왕흥사지, 능산리사지) 등이다. 평소에는 성곽에서 살다가 전쟁이나 질병, 흉년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찰을 찾아가 종교에 의지하고, 다시 죽으면 묻히던 곳이다. 백제인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죽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공주와 부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백제문화는 고구려문화나 신라문화와 더불어 작게는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민족문화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기능하였고, 크게는 중국 일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동아시아의 글로벌화를 주도한 주역이었다. 백제문화가 이웃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은 일본 땅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당시의 유적을 통해서도 한눈에 알 수 있거니와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고구려문화나 신라문화보다도 백제문화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데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선진문화라면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달

려가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일본에 전해주는데 인식하지 않았기에 일본의 고대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더더욱 각별했던 것이다.

왜 공주-부여인가

물론 그러한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왜 공주-부여뿐이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백제가 처음 건국한 곳은 서울이고, 마지막에는 익산 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에 도읍하고 있었던 기간은 약 500년에 이르고 있어 전체 백제 역사 700년의 2/3가 넘고, 익산에도 왕궁리토성 미륵사지 쌍릉 등과 같은 성곽과 사찰과 고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너무나도 현대화 되어버려 백제인의 숨결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풍납동토성이나 기계적으로 복원해 놓은 석촌동고분의 모습에서 백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세계유산이 된다는 것은 세계인이 우리 문화유산이 중요성을 인정하다는 것이지만, 그러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생활의 편리함만을 좇아 옛것을 지키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사진 2〉 부여의 정림사지와 백마강

익산 또한 왕궁리토성이 과연 백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의문이 남아있는 만

큼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중요한 세계문화유산 선정기준인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명문을 통해 미륵사지와 선화공주의 관계가 의심받게 된 만큼 쌍릉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라진 백제문명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는 현재 공주-부여에서만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백제문화재들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을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에 우선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냥 있어도 되는 문화재에 무슨 투자가 필요한가 등 부정적인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일단 되면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으며 그 부수적인 효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일본 관광객의 숫자는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근본 목적은 인류 전체를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달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주목하는 백제문화를 우리가 앞장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동안 관심 뒤에 묻어두었던 백제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때 백제문화의 우수성도 한층 빛날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 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4조 6,920억원, 사업발주 2,966억원



충남도는 지방경기 부양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55%인 4조 6,920억원을 배정했으며 사업발주도 2천 966억원을 집행하는 등 전국 16개 광역단체중에서 제일 우선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행정안전부의 경제극복추진을 위한 긴급회의 후 도 기획관리실장(최두영)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16개반 50명이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가 경제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이완구 지사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에서 200만 도민과 공직자에게 내년의 도정 운영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둘 계획이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도 금강 살리기 사업 시동

-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구성 등 발빠른 행보



충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을 백제문화와 생명이 흐르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1월 19일(월) 도청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도 및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 기획단(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공주(곰나루), 부여(합정) 지구를 2010 대백제전 수상무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이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 인접지역에서 문화·관광단지 추진시 수변공원 설치 등 하천정비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하천 점·사용허가의 갱신·신규 허가 등은 조건부 또는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여 역사테마파크 첫 삽 뜨다!

- 백제역사재현단지 롯데콘도미니엄 기공식



롯데의 민자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공식이 1월 22일(목)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 현지에서 열렸다.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부여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첫 삽을 뜬으로써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행여 투자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롯데는 총 3천100억 원을 투입하여 5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놀이공원, 친환경농업공원, 생태공원 등 테마파크 시설, 18홀 골프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4계절 전천후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착공하는 콘도미니엄은 322실의 객실과 컨벤션, 세미나, 아쿠아, 사우나시설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숙박과 휴양,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8천여명의 고용과 1조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파크가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롯데를 비롯한 국내 유수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백제문화 세계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강화 적극 추진

- 「도와 시·군 예산 중 680억을 절감하여, 일자리 1만 4천개 추가 창출, 긴급복지서비스 2만 가구 지원키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 산하기관, 민간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산의 절감으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이른바 신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공동 발표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있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2월 10일 도와 시·군의 기존 예산에서 68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법정보호대상자 외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한 기업근로자 등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지원 등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위기 가정 희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장·군수와 14개 민간단체장도 함께 했다. 한국노총충남본부, 충남새마을회, 바르게살기충남협의회, 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등 참석한 민간단체장들은 금년도 충남도 예산에 계상된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스스로 줄여서 지원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분위기가 충남도내에 조성되고 있다. 충남도의 이번 대책은 도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

가 있다.

도와 시군은 금년도 예산 10조 3,539억 원(도 3조 8,641, 시군 6조 4,898)중 국고보조사업, 채무상환, 법적의무적경비 등 절감이 불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1조 2,302억 원(도1,362, 시군 1조 940)을 대상으로 기존 예산을 정밀 재검토하여 이중 5.5%인 680억 원(도 100, 시군 580)을 다시 절감하기로 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예산은 이미 지난해 말 편성 당시 예년에 비하여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지만 금번 도와 시군이 수범을 보이는 취지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 것이다.

이번 예산절감은 도와 시·군, 민간단체에서 예산 낭비요인 발굴과 행사경비 등을 절감하였다. 특히 도비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취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일부 반납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하였다.

절감된 예산 중 400억 원은 우선 일자리 추가 창출에 사용된다. 기업 휴폐업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되, 일회성 소모성 사업이 아닌 기업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가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법정 보호대상자 외에 가장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위기가정 2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사망 으로 생활이 어려운 신 빈곤 가구이며, 이들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별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그간 도내 공업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전문계고 해외 인턴ships 농고와 수산고 등 도내의 모든 전문계 고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방문 한글교육(천안시), 저소득가정 전기안전점검(공주시), 저소득수급자녀 수학여행비 지원(보령시) 등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소외계층 지원시책도 발굴되어 추진된다.

道,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이 만족도 가장 높아

— 道内 172개 외투기업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72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충남의 기업 환경 중 긍정적인 요인으로 ▲비즈니스 관행 개선 ▲배후시장 확장 가능성 ▲노사관계 안정성 ▲조세감면 등 행정기관의 서비스 향상 ▲인접지역 연계교통 편리(도로·철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해요인으로 ▲관리직 및 생산직 인력수급 애로 ▲개별입지시 높은 토지가격 ▲해외금융이용 불편 ▲해상교통과 국제항공 이용 불편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부족 ▲외국인 전용 의료·교육 시설 부족 등이 개선할 과제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최초 투자년도를 기준으로 89년 이전 7개, 90~99년까지 31개, 2000~2004년 17개, 2005년 이후 18개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도 28개사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형태의 경우 응답기업 73개소 중 ▲본사만 있는 경우 2개 기업 ▲공장만 입지 17개 기업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있는 기업이 54개소(73%)로 투자기업 대부분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에서는 ▲자체 연구소를 갖춘 기업이 25개 기업, 연구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15개소,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이 17개소, 기타 16개소로 조사됐다.

입지 선정시 고려 요인으로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 근접성이 가장 높았으며 ▲세금 감면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생산제품 판매 주력시장은 ▲국내시장이 71%로 주로 지역 내 대기업에 65% 혹은 전국에 중간재 또는 원부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및 원자재 조달은 ▲해외와 국내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북에서 76%이상을 차지하고 해외는 절반 가까이(46%)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및 홍보 관련 개선과제로 ▲부지매매에 따른 자본이득(1%)은 입지 선정시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설문(인터뷰)에서 밝혀짐에 따라 개별입지보다 임대용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및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부품 및 원자재 조달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既 진출 기업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 개선과제로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대학생 대상 도내 외투기업 홍보강화 ▲도내대학 졸업생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해상운송 노선확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연계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어 가능 의료기관 지정 및 정보제공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교육 및 교육시설이 확충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평을 요구한 결과 10점 만점 중 6.7점 평점을 기록하였으며 기업들은 외국인 지원제도 중 입지지원 제도와 지방세 감면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道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 및 2008외투기업 CEO 간담회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환경 개선 과제와 관련된 실국과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신기술 도입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 설립

-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
- 시·군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진단·자문 역할



충남도는 시·군 공공디자인사업의 진단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하고 2월 23일 이완구 도지사, 강태봉 도의회의장, 센터 관계자 및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과 함께 공공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설립 목적은 현재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내 시·군 자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리며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활약이 기대된다.

설립 장소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의 공공디자인센터이며 센터장, 사무국장, 도내 6개 생활권역 지부별 2~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식사를 통해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과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역할 설명을 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공공디자인을 추진할 것”이라고 운영 기본방침을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는 자문위원과 운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축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효율 중심의 개발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문화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디자인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말하고 “이러한 때에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세계 명품 도시를 둘러보면 가로시설물과 건물 배치, 공원 조성 등 도시 전체가 세심하게 배려한 공공디자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한결같이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꾸어져 있다”면서 “지금 우리도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백제역사의 숨결과 문화를 접목시킨 명품 충남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소식 후에 이어진 공공디자인 포럼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충청남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온영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온영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간 환경 디자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력형 설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충청남도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클리닉센터를 설립한 것은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 의지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이며 충남 공공디자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충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 가져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Think Tank 역할 수행



충남도는 3월 6일 아산시 호서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기업인, 사회단체, 도민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창립식을 가졌다.

이는 세계적인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나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식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만의 환경부장관, 강태봉 충청도 의회의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서대 강일구(남, 65세, 논산) 총장을 포럼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세계에서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은 필연이자 숙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녹색성장포럼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완구 지사가 건의한 내용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석면광산 추가 피해방지대책 조속 추진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정화사업 ▲아산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지원 ▲폐기물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지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 등이다.

한편, 오늘 구성된 충청남도 녹색성장포럼은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고 매 분기별 포럼을 개최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 등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충남발전연구, 충남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워크숍 가져



충남발전연구원(CDI, 원장 김용웅)은 1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언론인, 충남발언 및 충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충남의 전통문화와 공공디자인간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충남 공공디자인의 비전인 『Renovate Chungnam』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발전연구원 추용욱 박사는 "공공디자인은 분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창조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등 계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큰 분야다."라고 언급하면서 "예산 낭비식 행정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박사는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사례와 접목하면서 "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핵심은 3W 1H(Why, What, Who, How)이다. 즉, 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지, 무엇을 디자인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지,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남서울대학교 이광영 교수는 "충남은 유구한 백제역사문화를 보유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및 행복도시 건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반면, 급격한 개발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과 혼잡한 도시경관, 디자인산업 인프라 및 인식의 취약, 그리고 성급한 디자인정책에 따른 역효과 등으로 인해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에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충남이 효과적인 디자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디자인총괄본부(가칭)를 시급히 조직하여 공공디자인 추진에 대한 목표, 추진전략과 체계를 갖추고 도시 전체 지구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 충남도의회 행자위 2009년도 업무보고회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은 2월 5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행자위 의원들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도정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하고 언급하면서 "행복도시, 수도권규제완화,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 등 굵직한 현안과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웅 원장은 "산적인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적시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의정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역사·특색반영된 사업으로”

— 800여명 성황…사업방향·과제 등 놓고 열기



금강 살리기는 금강의 역사와 특색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강 살리기의 파급 효과를 내륙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대전일보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월 12일 오후 1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3층 컨퍼런스홀에서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금강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엽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재정팀장은 '4대강 살리기 및 금강 살리기 사업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생활에서 '강'이 갖는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를 회복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태동했다"면서 "4대 강 살리기의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하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금강 하류에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니(汚泥)를 준설할 계획으로 하천 내 경작을 금지하고 백마강 뱃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 팀장은 덧붙였다.



이어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은 '금강 살리기 연계 지역파급 효과와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금강 살리기에 정책적으로 부합하면서 지역 특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화, 통합화, 블록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의 주제를 발표한 김명수 한밭대 교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최근 하천 복원 사업들이 보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강이 지닌 물류 중심, 문화적 가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상민 국회의원,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일보 2월 13일자 1면〉

충남발전연구, 통계자료의 올바른 활용 방안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3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 통계담당자인 조한석 박사를 초청, "통계법 개정과 연구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기관의 특성상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특강은 연구보고서 작성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통계자료 사용 및 올바른 설문조사방법, 그리고 통계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 연구과제 수행시 봉착하게 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또한, 조한석 박사는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속적 통계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에 따른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충남도에서는 종합적 통계조정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그리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이 포함된 충남통계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입안시 활용할 정확하고 실용적인 충남통계통합DB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충남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경제 불황 벗어나기 위해 정책 설정에 큰 힘 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



녹색성장산업 정책마련과 방안모색을 위한 "녹색뉴딜정책 심포지엄"이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CDI) 공동으로 3월 23일(월)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녹색뉴딜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은 2012년까지 총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핵심 정책임에는 틀림없다."고 언급하면서도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면에 있어서도 안정적 일자리,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을 보완하여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성장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 ▲국민 의식개선 및 녹색생활 시스템 마련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SW 및 공간정보산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지향 사업 추진 ▲녹색국토공간 형성 사업 추진 지자체 및 시민단체, 국민 참여 지원 및 확대 ▲외국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추

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당면 과제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 내 기후벤처산업의 활성화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활발한 정책 지원 ▲기후관련 규제강화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로 경기 침체에 대응 ▲국가적 형평성을 고려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성장동력센터 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통해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에 달려 있는 만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춰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는 녹색뉴딜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및 기술혁신역량을 반영한 최적의 녹색지역혁신체제(GRIS)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뉴딜정책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부문별 단기 추진과제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관광숙박업 육성 ▲에코시스템 기반 녹색 여행업 육성 ▲녹색 기술을 접목한 유원시설업 육성 ▲제로 에너지 그린이벤트 개최 지원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녹색관광사회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완 행정부시자는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환경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 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녹색뉴딜사업이 향후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밝은 미래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오늘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정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구상하여 행정에 접목,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완 도 행정부지사,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학계·언론계·NGO단체 전문가, 그리고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충청권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세미나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1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익일 12시까지 대전 및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및 주무관, 전국RHRD센터장 및 연구진, 시·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초광역 인재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박사(광역권 인재육성사업의 전망과 효율적 활용방안), 김문연 울산RHRD센터장(부·울·경 광역권 인재육성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그리고 충청권 광역사업의 창의적 발굴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천안시 소재)에서 충청남도청 관계관, 평생교육원 관계관, 16개 시·군 담당자 및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8개 시·군에서 사례발표를 하였고, 2008년 평생학습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박선경 실무관(우수 평생학습네트워크 사례발표)과 아주대학교 이장익 교수(시스템 구성 콘텐츠 개발)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구성과 콘텐츠 개발, 홍보방안 등 「(가칭)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 및 대전·충남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2월 11일(수),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김용웅 의장(충남발전연구원장)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충남발전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국협의회회의 최근동향 및 현행 문제

점과 함께 향후 대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2월 19일(목)~20일(금),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협의회 사무국장(충남 최병학 사무국장, 대전 김기희 사무국장) 및 시·도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대전·충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및 '녹색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균형발전위원회) 강성탁 담당 사무관의 교육과 추후 (가칭)"지역발전법"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초청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제도의 법률 및 기술적인 부분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하여 2월 24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상진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현황', 환경부 유역총량제도와 조석훈 사무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진행정도와 제도의 개선사항, 향후 정책방향 등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2단계 총량관리제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총량관리제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도시재생을 위한 국제세미나」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는 지방도시의 재생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세미나 및 현지답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는 영국의 어반플라즈마 양도식 박사가 "영국지방도시의 성공적 도시재생 사례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버밍햄시, 브리스톨시, 맨체스터시 살포드 독의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재생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단계적 유동적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정부 및 지자체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리더십,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일본 오카야마대학의 김두철 교수는 일본 나고야시 오조네 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지구단위 간 합의 형성과 주변 시가지 정비와 함께 지역 전체의 일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로 아산시의 '온양중심상권재정비촉진지구', 군산시의 '구도심 및 내항일원 활성화계획', 마산시의 '오동동시장 및 마산시 도시재생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임서환 전 도시재생사업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수,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장, 황희연 국토도시계획학회장, 정철모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모색하였다. 논의 결과 도시재생의 일반화된 모델은 없으며 지역의 역사성, 사회성, 경제성을 반영시켜 지역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19일에는 오전에는 아산시 '온양중심상권촉진지구'의 낙후된 주거지역과 상설시장 등을 답사한 후 아산시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산시의 단계적 장기적 개발전략과 마스터플랜을 강조하였으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회복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관광휴양기능에 해외사업을 접목 및 아산 신도심 및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을 꾀하며, 주민참여와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천안시와 경쟁 또는 상생관계를 고려한 전략 및 광역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에는 군산시 '구도심과 내항일원'의 군산역, 근대역사건축물(구 조선은행, 세관 등) 등을 조사한 후 군산시청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과 배후지의 연계성, 근대역사유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군산시의 근대역사건축물, 철도를 큰 자산으로 하여 경쟁력 고취,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중국과의 연계방안과 철새를 활용한 아이디어,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역할 분담, 랜드마크, 특성화된 대학, 교통 등을 고려한 광역적 도시계획 추진, 성장단계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계획,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향후에도 도시재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 및 잠재력, 주민참여를 유도한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의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20일에는 마산시의 산업단지 일원 및 구도심지역, 오동동 시장 골목의 공공미술 등을 현장답

사하고 시청으로 이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볼티모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언, 로봇랜드가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마산시의 민관협의회의 역할 강조, 오동동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를 타 지역까지 확대, 민관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협의회의 역할,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마산시의 대응 그리고 마산시가 가지고 있는 워터프론트를 통한 문화 창조 가능성과 도시재생은 주체(민관협력), 시간(장기적 플랜), 창의성(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

「충청지역연구」 논문 모집 안내

「충청지역연구」는

1.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발간하는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이 원칙이며, 매년 6월말, 12월말에 발간됩니다.
3. 원고 투고 분야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경제, 환경생태 등으로 한정하되, 충청지역과의 직·간접적 연관이있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 투고 및 게재

1.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논문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를 아래의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연구” 담당자

[314-140]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T : 041-840-1123 / F :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2. 원고 마감 : 매년 5월말, 11월말일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후 채택된 원고에 한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확정됩니다. 또한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6. 「충청지역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십시오.
7.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학술지인 「충청지역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KOREA FLORITOPIA 2009

<http://floritopia.or.kr>

<http://flower-expo.kr>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꽃, 바다 그리고 꿈

Flower,
Ocean
& Dream

2009. 4. 24(금) ~ 5. 20(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수목원 -





직산현 관아(稷山縣 官衙)

조선시대 충청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직산현의 관아 건물이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조선후기 직산현에는 객사 19칸, 군기고 6칸, 동헌 14칸, 내아 30칸 등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외삼문과 내삼문, 외동헌, 내동헌 4동만 남아 있다.

관아의 정문에 해당하는 외삼문에는 '호서계수아문(湖西界首衙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말 그대로 '호서지역 경계의 머리에 해당하는 아문'이라는 뜻인데, 경기도 땅에서 호서 땅으로 들어서는 경계의 첫 머리에 위치한 직산현의 지리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삼문을 지나면 동헌 앞에 자리한 내삼문이 있는데, 가운데 칸에 출입문인 솟을대문이 있고 양 옆에는 관아의 각종 기물을 보관하던 창고 방이 달려 있다. 내삼문의 안쪽에는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보던 건물인 외동헌(직산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함)과 수령의 살림집에 해당하는 내동헌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헌은 수령의 집무공간으로만 알고 있는데, 직산관아의 경우 외동헌과 내동헌이 모두 남아 있어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진모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THE CHUNGNAM REVIEW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